

#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2022. 06. 29 (수)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성 일 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협력단체 |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공정언론국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 한국 연금 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일 시 | 2022년 6월 29일 (수) 오후 2시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주 최 | 성 일 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 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 목 차

|               |                  |   |
|---------------|------------------|---|
| 【인 사 말】 성 일 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 9 |
|---------------|------------------|---|

|             |                 |    |
|-------------|-----------------|----|
| 【축 사】 권 성 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 10 |
|-------------|-----------------|----|

|       |                 |    |
|-------|-----------------|----|
| 강 기 윤 | 국민의힘 국회의원 ..... | 11 |
|-------|-----------------|----|

## 【주 제】 한국 연금 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 【주 제 발 표】

|             |             |    |
|-------------|-------------|----|
| 오 건 호       | 정책위원장 ..... | 13 |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    |

### 【토 론 문】

|              |          |    |
|--------------|----------|----|
| 김 원 섭        | 교수 ..... | 31 |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          |    |

|                |          |    |
|----------------|----------|----|
| 강 성 호          | 박사 ..... | 41 |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                |          |    |
|----------------|----------|----|
| 주 은 선          | 교수 ..... | 51 |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

|                                           |    |
|-------------------------------------------|----|
| 【부 록】 본 연구회 (연혁/공지사항/ 협력기관 및 단체) 소개 ..... | 63 |
|-------------------------------------------|----|



## 프로그램

### 1 부

사회 : 김 은 경 교수  
삼육대학교 / 본 연구회 사무국장

- 1) 개회선언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 2) 국민의례
- 3) 인 사 말 ..... 성 일 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4) 격려사 ..... 이 갑 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 5) 축 사 ..... 권 성 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강 기 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 6) 단체기념사진 ..... 모든 참석자

### 2 부

좌장 : 이 용 하  
前국민연금연구원 원장

#### ○ 주제발표

한국 연금 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 오 건 호 정책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 토 론

..... 김 원 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 강 성 호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 은 선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참관자 질의/응답

○ 총 마무리 발언 ..... 이 용 하 박사



# 인사말



**성 일 중**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중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연금체계 현안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연금체계가 개혁의 필요성을 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과거 경제의 고성장과 인구 증가,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체계의 합리적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현행 연금체계의 유지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혹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권 5년간 혁신과 개혁은 실종되었고, 노동, 연금, 교육 등 다양한 부분의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습니다. 임기 5년의 단임 정권이 욕 먹기가 두려워 국가의 50년 미래를 훼손한 꼴입니다.

지난 16일 개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연금 제도에 관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파를 떠나 적극적으로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이외의 연금들도 시급히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선안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국회에서 현행 연금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 일 중

# 축 사



**권 성 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입니다.

먼저,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성일종 정책위의장님과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좌장으로 함께해주신 이용하 前국민연금연구원장님과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님,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님, 강성호 보험연구원 박사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 문제 등으로 ‘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왔고,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세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정부는 정권의 지지율과 선거 득실에만 매몰되어 연금개혁을 방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5년 동안 공무원을 무려 12만 9천 명 증원했고, 그 결과 공무원·군인연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 총당부채는 2016년에 비해 400조원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부담하는 총당부채 부담액도 2016년 1,469만원에서 지난해 2,205만원으로 5년 새 736만 원 급증했습니다.

연금개혁 시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미래세대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연금체계 개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일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앞으로 우리 국회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뒷받침에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 성 동

# 축 사



강 기 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강기윤입니다.

먼저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미나를 준비하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님, 이정숙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세미나 발제와 토의를 맡아주신 전문가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공적연금 재원조달 및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려 국민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에게 연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연금 시기를 늦추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래할 위험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은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만큼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진행되는 세미나가 연금체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이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어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 기 윤





[주 제 발 표]

##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오 건 호 정책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前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실장

前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前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sup>1)</sup>

## 1. 시작하며

한국의 법정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도입시기와 목표가 다르지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연금체계 형식은 갖춘 셈이다. 현재 세 연금 모두 개혁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성이 낮다. 국민연금은 가입이 노동시장 지위와 연동하기에 불안정 취업자 다수가 제도 밖에 머물고 현재 수령 연금액도 그리 높지 않다. 기초연금은 도입 이후 대통령선거마다 10만원씩 올랐지만 OECD 국가들에 비해 급여 수준은 여전히 낮고 제도 성격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퇴직연금은 법정 의무연금이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거의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아직 연금으로 역할하지 못한다.

앞으로 한국의 연금체계를 어떻게 개혁할까?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소득보장성 강화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이 두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사실상 두 목표는 서로 상충하기에 적절한 조합이 요구된다. 또한 하나의 연금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에 다층연금체계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한국은 국민연금에서 재정불균형이 무척 크고, 빠른 인구고령화로 노후부양비도 갈수록 높아진다. 그만큼 현행 연금체계에서 해법을 찾기가 만만하지 않다. 계층, 세대간 열린 시야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듯하다. 연금개혁의 방향과 목표는 당위적 수준에서 동의하더라도 연금체계의 실태 진단을 두고 상이한 인식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으로서 핵심 제도인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둘러싸고 인식의 차이가 크며, 이로 인해 연금개혁의 방향도 갈린다. 이 글은 국민연금 재정 관련 주요 논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연금개혁의 방향을 제안한다.

## 2. 국민연금 재정 진단: 수지불균형

### 1)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계산하여 장기 재정균형 유지를 위한 연금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이에 맞춰 조정해 가야 한다. 이에 노

1) 이 발표문은 필자의 기존 원고들을 재구성하여 작성했음. 오건호(2021). “한국 노후소득보장의 재구조화 연구: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4). 오건호(2022). “현단계 공적연금 개혁방안 모색” (이슈페이퍼 2022-4),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2022), “5차 재정계산 대비 주요 논점과 재정안정화 방안” [연금포럼] Vol. 85. 국민연금연구원.

무현 정부는 1차 재정계산 작업을 벌이고 2007년 연금개혁을 수행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2차, 박근혜 정부에서 3차,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실제 국민연금 개혁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의하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에 최고에 도달한 후 빠르게 줄어 2057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만약 소진 이후 연금지출에 필요한 재정을 당시 가입자 보험료로 충당한다면, 소진년도인 2057년에는 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이 24.6%이고 재정계산 최종연도인 2088년에는 28.8%에 이른다.

<표 1>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괄호 안은 3차 결과)

| 특징           | 현재             | GDP최고          | 기금최고           | 수지적자           | 기금소진           | 최종연도           |
|--------------|----------------|----------------|----------------|----------------|----------------|----------------|
| 구분           | 2018<br>(2013) | 2035<br>(2035) | 2041<br>(2043) | 2042<br>(2044) | 2057<br>(2060) | 2088<br>(2083) |
| 기금 (조원)      | 671            | 1,642          | 1,778          | 1,769          | 0              | 0              |
| GDP 비중 (%)   | 37.2           | 48.2           | 44.0           | 42.7           | 0              | 0              |
| 연금지출 (%)     | 1.3            | 3.2            | 4.4            | 4.5            | 6.9            | 9.5            |
| 부과방식 비용률 (%) | 4.6            | 11.5           | 15.6           |                | 24.6<br>(21.4) | 28.8<br>(22.9) |

- 출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8).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2041년과 2057년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2018).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2018.12, p. 43.

그런데 4차 재정계산은 2016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출산율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2015년 출산율을 1.24명으로 가정했으나 실제 출산율은 1.05명이었다. 재정계산에서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미래 가입자수가 줄어들므로 실제 출산율을 반영하면 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은 더 높아진다.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8: 68)는 저출산을 고려해 대안 모델들을 계산했는데, 2020년 1.05명을 적용한 대안 추계에서는 2088년 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이 37.7%로 크게 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2020: 134)도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출산율을 반영해 분석했는데, 2080년 필요보험료율이 35.6%에 달한다.

만약 현행 제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이는 미래 가입자들은 현세대와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으면서 현세대에 비해 3~4배의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분석 결과이다. 미래 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과 빠른 고령화(높은 노인 부양비) 때문이다. 특히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에 비해 보험료율이 낮고 이 수지불균형이 후세대 부담으로 넘어가기에 미래 재정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세대간 형평성 문제까지 지닌다.

## 2) 국민연금 수지불균형 진단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은 어느 정도일까? 국민연금공단은 2028년 가입자 기준으로 평균 소득자의 수익비가 평균 1.8배라고 설명한다. 국민연금 급여구조에서 절반의 균등급여 영향으로 수익비는 누진적인데 평균소득자는 낸 것 대비 1.8배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표 2> 국민연금 소득수준별 수익비

| 구분     | 29만원<br>(하한액)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27만원<br>('18년 A값) | 300만원 | 449만원<br>(상한액) |
|--------|---------------|------|-------|-------|--------------------|-------|----------------|
| 수익비(배) | 4.5           | 4.5  | 3.0   | 1.9   | 1.8                | 1.6   | 1.4            |

\* 매년 소득은 가입자 평균소득상승률, 기본연금액을 물가상승 연동, 총 수급기간은 20년 가정

- 자료: 국민연금공단(2018). [2018 국민연금 바로보기: 국민연금을 말하다]. 103쪽.

하지만 이 수익비는 수급기간을 20년으로 상정하고 유족연금 급여가 제외된 분석 결과여서 국민연금의 수지상태를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다.<sup>2)</sup> 실제 늘어난 기대여명을 반영해 수급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하고 가입자의 급여총액에 본인의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유족연금까지 포함하면 평균 수익비는 2.5배 수준으로 높아진다(2028년 가입, 20년 납부 기준).

수익비 분석에서는 할인율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가 현재가치로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받을 연금액 총액을 임금상승률로 할인한다. 하지만 세대간 재정 부담 몫을 따질 때는 현재세 보험료 기여분이 만들어내는 기금수익도 감안하는 게 적절하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기금수익률로 할인하면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2.2배에 달한다. 위에 따르면, 현재 가입자가 40% 소득대체율에서 수지균형을 도모하려면 보험료율은 약 20%(현행 9% \* 2.2) 수준으로 근접한다.

<표 3> 국민연금 소득수준별 수익비

(노령연금+유족연금, 기대여명 25년 수급)

| 할인율 \ 소득 | 100만원 | 평균소득자<br>(227만원) | 300만원 | 최고소득자 |
|----------|-------|------------------|-------|-------|
| 임금상승률    | 4.1   | 2.5              | 2.2   | 1.9   |
| 기금수익률    | 3.7   | 2.2              | 2.0   | 1.7   |

\* 2028년 가입, 20년 납부 기준

-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8).

한편 국민연금에서 수지균형을 따지는 일이 공적연금의 세대간 부양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2017). 그런데 연금분석에서 수익비는 개별 가입자의 투자수익이 아니라 가입자 전체 혹은 소득계층별 연금수리적 실태를 진단하는 지표이다.

2) OECD(2021: 171) 연금보고서에서 65세 시점의 기대여명을 보면, 한국은 2015~2020년에 남 18.5년, 여 22.6년에서 2060-65년에는 남 23.0년, 여 27.4년으로 증가함(2061년에 65세인 코호트의 기대여명은 남 24.3년, 여 30.9년으로 더 김).

스웨덴에서 재정균형 지표로 사용하는 적립률 역시 전체 가입자 기준 수익비를 1로 맞추려는 개념에 다름아니다. OECD 국가들에서 연금개혁에서 자동안정화까지 도입하는 것도 결국 세대별 수지균형을 도모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관건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현재세대의 책임 몫이다. 서구에서 1980년대 이전까지 공적연금 역사는 미래세대 재정 부담을 염려하지 않았다. 당시는 경제성장과 인구보너스 환경에서 미래세대가 연금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과 인구오너스 시대여서 미래로 갈수록 노인부양 부담이 커지고 의료비 부담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OECD 국가들은 미래세대 부담을 감안하여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고 있다. 한국도 초고령사회를 맞아 미래세대의 노년부양비가 훨씬 커질 전망이다. 현재세대가 국민연금에서는 자신이 받을 급여만큼의 재정은 스스로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연금재정에 대한 연금수리적 분석은 필요한 작업이다.

### 3.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둘러싼 논점: 추계기간과 기금수익

#### 1) 재정목표에서 추계기간의 중요성

연금개혁에서 재정목표인 ‘재정균형’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목표는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사실 제4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3차 재정계산에서는 명확한 재정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조합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70년 기간 적립배율 1배”를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달성할 재정목표로 합의했다(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2018: 6). 이는 국민연금이 70년 후에 1년간 지급할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정균형’으로 평가한다는 취지로서, 지난 1~3차 재정계산에서 분석했던 ‘70년 적립배율 2배’를 조금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실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정목표를 지키지 않았다. 두 개의 복수안을 제시하면서 추계기간 30년에 기초한 ‘가’안도 용인했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서는 30년 후인 2048년까지는 여전히 국민연금기금이 적립배율 1배를 넘으므로 4차 재정계산 시점에서 재정안정화 조치는 요구되지 않는다. 대신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2% 포인트 인상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30년 재정추계에서는 현행 기금이 존재하는 기간까지만 추계하므로 당장은 보험료를 인상이 요구되지 않지만 2034년부터는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며 보험료율은 인상이 늦어진 만큼 이후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나’안은 위원회가 정한 추계기간 70년을 기준으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2057년에 소진되는 기금곡선을 2088년에 적립배율 1배까지 연장하는 강력한 재정안정화 조치로서, 1단계에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2단계에서는 급여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나’안은

논의과정부터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다. 2018년 8월에 열린 공청회에서는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두고 여론의 비판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최종 4개의 정부 연금개혁안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표 4> 재정안정화 방안 비교

| 구분    | ‘가’안                                      | ‘나’안             |                          |
|-------|-------------------------------------------|------------------|--------------------------|
|       |                                           | 1단계(2019~2029)   | 2단계(2030~2088)           |
| 재정목표  | 30년 추계 · 적립배율 1배                          | 70년 추계 · 적립배율 1배 |                          |
| 소득대체율 | 45%                                       | 40%              | - 기여·지출조정<br>(수급개시연령 상향) |
| 보험료율  | - 2019년부터 인상(11%)<br>- 보험료율 18% 초과분 재정 지원 | 13.5%            | (기대여명계수 도입)              |

자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2018), 51-63쪽 정리, 오건호(2021), 131쪽에서 재인용.

이처럼 국민연금 재정목표 설정에서 추계기간은 무척 중요한 변수이다. 국민연금의 수지 불균형 구조에서는 추계기간이 길수록 재정안정화 강도는 높고 반대의 경우는 낮아진다.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기 재정균형을 위한 개혁안을 설계할 의무를 지닌 기구이다. 최종적으로 연금개혁은 사회적 대화와 정치권의 참여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위원회는 재정 계산 작업을 토대로 법이 정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5차 재정계산에서는 재정 목표가 명확히 수립되고 이를 구현하는 연금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기금수익의 역할

4차 재정계산 이후 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가입자단체를 중심으로 70년 재정계산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4차 재정계산에서 재정불안정이 심화되고 재정안정화 요구 강도가 높아지자, ‘70년 장기 재정계산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다.

70년 추계는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부터 적용되어 왔다. 당시 추계기간이 길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장기 인구구조와 노인부양비 전망, 가입자 수명 등을 감안하여 70년이 채택되었다. 연금 선진국들도 대부분 인간의 수명을 기준으로 재정계산을 벌이며, 일찍이 ILO도 65~100년의 장기 추계를 제안했다<sup>3)</sup>. 현재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장기추계하고 있으며, 상당한 재정불균형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더욱 장기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3) ILO(1998). Internal guideline for the actuarial analysis of a national social security pension scheme. ILO FACTS. Geneva: ILO.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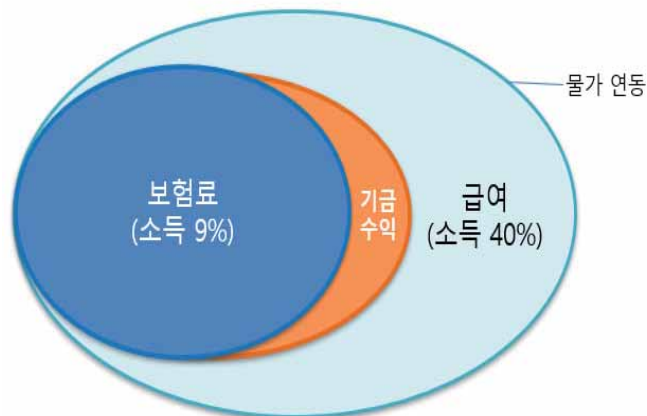
[적정 재정추계기간을 2070년으로 한 근거]

- 국민연금제도의 성숙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재정안정화 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 노인부양비가 더 이상 급증하지 않고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기
- 신규가입자의 기대여명을 고려할 때 가입자가 자신의 생존기간 동안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신뢰 제공에 필요한 기간

자료: 보건복지부(2003),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2003.8.19.), 20쪽.

여기서 장기추계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은 70년 후의 인구,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장기 재정추계에 따른 한계는 존재한다. 그렇다고 연금재정에 대한 장기 진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연금 재정계산은 미래 경제성장률, 연금지출 등 절대 수치를 알아맞히는 작업이 아니다. 이러한 변수를 종합해 도출된 연금재정구조, 즉 재정수입과 지출의 구조 진단이 최종목표이다. 여기서 미래 연금수입과 지출이 기본적으로 가입자 소득이라는 동일한 변수에 연동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미래 가입자 소득의 절대값이 어떻게 변하든 이와 연동하는 수입과 지출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기에 장기 재정진단이 가능한 것이다.

[그림 1] 국민연금 재정구조: 수입과 지출



[그림 1]은 국민연금의 재정구조를 보여준다. 전체 연금지출(급여)과 수입(보험료) 면적이 있으며, 중간에 기금수익이 존재한다.<sup>4)</sup> 이때 급여와 보험료는 가입자 소득에 연동되며, 기금수익은 독립변수이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매우 높다는 점은 그림에서 급여와 보험료 면

4) 급여지출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연동되나 수급개시 시점에서 산정된 연금액은 이후 물가와 연동된다. 따라서 물가도 급여지출 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소득상승률과 같은 방향에서 연동할 것이다.



적의 차이가 무척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때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변수가 기금수익이지만 워낙 급여와 보험료 면적 차이가 커서 미래 연금재정의 기본구조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래 2022년 3월까지 조성한 1202조원은 보험료 수입 696조원과 기금수익 506조원으로 구성된다.<sup>5)</sup> 이 수치만 보면 기금수익이 보험료 부족분을 상당히 충당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국민연금에서 신규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기금수익 중 후세대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몫은 기금수익 전체가 아니라 임금상승 급여분을 넘어서는 초과분이다. 4차 재정계산에서 추계기간 구간별로 임금상승률은 3.6~4.0%, 기금수익률은 4.3~4.9%이므로 초과수익 몫은 0.5~0.9% 포인트에 그친다(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 77). 기금수익률이 높을수록 재정안정 기여분도 커지겠지만 공적연금기금이 수익성만을 우선할 수 없고 고수익은 고위험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기금수익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인간의 수명을 고려하면 70년 이상의 재정계산은 불가피하다. 비록 장기 추계여서 사회경제적 변수의 전망치가 빗나갈 수 있지만 연금 재정계산이 개별 변수값의 예측이 아니라 수입과 지출 구조를 진단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장기 추계는 유효하다. 5차 재정계산에서는 70년 추계기간에 대한 논점들을 정리해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 4.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적립배율 1배 의미와 부과방식 전망

보통 재정목표에서 재정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는 적립률(funding ratio), 적립배율(reserve ratio)이다. 적립률은 일정기간 총자산 대비 총지출의 비율이다. 스웨덴에서는 이름이 균형비(balance ratio)인데, 비율이 1이라면 미래 부채와 자산 규모가 같은 재정안정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서구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한 재정균형 지표는 적립배율이다. 연금 선진국들은 다수가 국민연금처럼 재정추계 기간에 일정 적립배율 유지를 재정목표로 삼고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연금 선진국들은 이미 안정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고 있다. 적립률 지표를 사용하는 스웨덴은 2018년 이후 균형비가 1.0배에 도달했으며 완충기금(buffer fund)까지 감안하면 2024년에 1.1배로 상향하고 이후에도 안정적인 전망이다(Swedish Pensions Agency 2019: 53-55). 적립배율을 사용하는 나라를 보면, 캐나다는 2020년에 적립배율이 7.5배이고 2095년 9.5배까지 더 오르며(Office of the Chief Actuary 2019: 36), 핀란드도 2020년 8배의 적립배율이 2085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Tikanmaki H. et.al. 2019: 68).

5)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fund/mcs/mcs\\_08\\_01.jsp](https://www.nps.or.kr/jsppage/fund/mcs/mcs_08_01.jsp). 2022.6.19. 접속).

〈표 5〉 주요 나라의 공적연금 재정목표 달성 평가

| 나라  | 재정목표<br>(구체 지표)           | 추계기간             | 평가 결과                 |
|-----|---------------------------|------------------|-----------------------|
| 스웨덴 | 적립률<br>(균형비 1)            | 75년              | 2024년 1.1배            |
| 독일  | 수지균형<br>(적립배율 월 0.2~1.5배) | 15년<br>(5년 중기전망) | 약 1개월                 |
| 핀란드 | 수지균형                      | 70년              | 2020년 8배, 2085년 8배    |
| 캐나다 | 일정한 적립배율<br>(5~6배)        | 75년              | 2020년 7.5, 2095년 9.5배 |
| 한국  | (적립배율 1배)                 | 70년              | 2057년 소진              |

자료: 여러 문서를 토대로 필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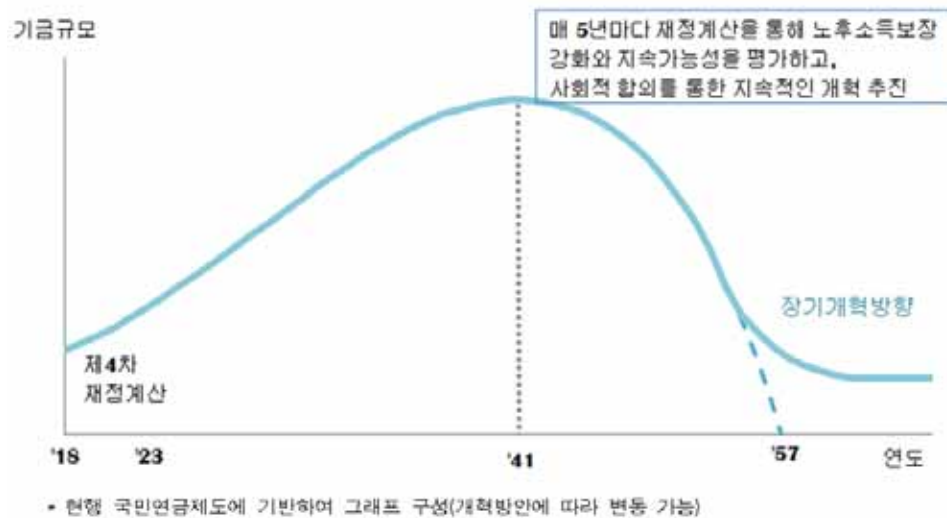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재정균형 지표는 적립배율이다. 1~3차 재정계산에서는 적립배율 2배가 핵심 재정목표로 활용되었으나 4차 재정계산에서는 1배로 조금 낮추어졌다.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57년에 소진되므로 70년 후인 2088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 조치가 요구되고, 만약에 2020년에 일시에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현행 9%가 16.02%로 인상되어야 한다(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 88).

한편,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국민연금의 적립배율 1배가 지니는 유한성도 유의해야 한다. 연금 선진국의 적립배율은 추계기간 내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국민연금에서 적립배율 1배는 2088년 시점의 한시적 기금규모이며 이후 하락한다. 만약 4차 재정계산에 따라 적립배율 1배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조치가 취해졌더라도 5년 후인 제5차 재정계산에는 추가 재정안정화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면에서 국민연금에서 적립배율 1배는 ‘과정상의 재정목표’이다.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전망에서 부과방식 전환도 이제는 검토해야 할 주제이다. 지금까지 연금개혁 논의과정을 보면, 서구 연금을 사례로 들며 국민연금도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방식으로 가면 된다는 주장에서, 애초부터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 부과방식으로 예고되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sup>6)</sup> 4차 재정계산 이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도 부과방식 전환을 의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4개의 연금개혁안을 제안한 후에 “장기적인 공적연금 개혁방향”으로 [그림 2]를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소진 직전에 재정안정화를 시작하여 낮은 적립배율을 유지하는 사실상 부과방식 제도로 그려진다.

6)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에 본래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지나치게 많이 쌓인 기금이 점차 줄어들고, 매년 걷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참여연대 2018).

[그림 2] 국민연금의 장기적 개혁 방향 (미래)



- 자료: 보건복지부(2018). 38쪽.

현재 국민연금에서 미래 지급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시민들의 질문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에서 적립배율 1배가 재정균형에서 유한한 지표라는 점을 설명하고, 동시에 국민연금이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 가능한 이행경로 모형과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점도 명확해질 것이다.

## 5. 연금개혁의 시야 확대: 다층연금체계와 최저노후보장

우리나라 법정연금에서 국민연금이 핵심 제도이지만 다른 연금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어느새 월 30만원으로 성장했으며 2022년 대선 공약을 토대로 윤석열정부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1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월 평균액이 55.6만원임을 감안하면, 기초연금은 대상 규모와 급여 수준에서 국민연금에 근접한 제도가 되었다. 퇴직연금도 2019년 보험료 수입이 34.1조원으로 당시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71%에 달할만큼 기여 수준이 높은 제도이다(양재진 2020: 24).

지금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연금개혁안의 대상은 사실상 국민연금에 한정되었다. 국민연금법에서 재정계산이 국민연금 재정을 진단하고 재정균형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4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기초연금을 일부 다루었지만 발전 방안은 향후 과제로 넘겼으며(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2018: 69-71), 퇴직연금도 다층연금체계에서 필요성을 제시할 뿐 개혁안에 담지는 않았다.

OECD는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해 의무적 연금틀에서 연금개혁을 다루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연금개혁의 시야를 국민연금을 넘어 다층연금체계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 현실을 감안하여 보장성 목표에서 최저노후보장도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근래 외국의 연금개혁에서도 저소득 불안정계층 노후소득보장에 집중하는 재조준화가 진행되고 있다(이다미 2019: 262).

[그림 3]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안

|        | 1안: 현행유지             | 2안: 기초연금 강화            | 3안: 국민연금 강화           | 4안: 국민연금 강화           |
|--------|----------------------|------------------------|-----------------------|-----------------------|
|        | 소득대체율 40%<br>보험료율 9% | 소득대체율 40%<br>기초연금 40만원 | 소득대체율 45%<br>보험료율 12% | 소득대체율 50%<br>보험료율 13% |
| 실질급여액* | 86.7만원               | 101.7만원                | 91.9만원                | 97.1만원                |
| 소진시점   | 2057년                | 2057년                  | 2063년                 | 2062년                 |

\* 실질급여액은 평균소득자(250만원, 25년 가입)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액  
자료: 보건복지부(2018).

형식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도 다층연금체계와 최저노후보장의 문제의식은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해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하여 약 100만원을 보장하는 ‘최저노후생활 보장(National Minimum)’ 개념을 제시한다. 하지만 실제 제시한 4개 개혁안은 각각 기초연금 혹은 국민연금만을 개편하는 단층개혁안이며, 최저노후생활보장 100만원은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설정된 금액이다. 다층연금체계는 문구로만 존재했으며 최저노후생활보장은 사회정책의 ‘최저’ 원리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5차 재정계산은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국민연금과 함께 다층연금체계 개혁안을 제안하고 하위계층의 노후보장을 두텁게 하는 최저노후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최저노후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재구조화가 요청된다. <표 6>에서 보듯이, 기초연금은 OECD 회원국의 비슷한 기초보장제도와 비교해 급여 수준이 낮으며, 지급대상이 소득 수준이 아니라 노인의 일정 비율(70%)로 정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인상, 보충연금 도입, 최저보장소득 전환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므로, 5차 재정계산에서 진전된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이상은 2022; 최옥금 2020).

<표 6> OECD 회원국의 노후 최저보장소득 현황 (%)

|                | 한국   | 호주   | 멕시코  | 핀란드  | 스웨덴  | 캐나다  | 덴마크  | 이태리  | 프랑스  | 독일   | OECD<br>평균 |
|----------------|------|------|------|------|------|------|------|------|------|------|------------|
| 대체율<br>(2020)  | 7.8  | 27.0 | 11.9 | 21.9 | 22.2 | 19.2 | 19.6 | 19.8 | 28.4 | 19.3 | 19.0       |
| 적용범위<br>(2018) | 69.0 | 63.0 | 55.0 | 38.0 | 35.0 | 32.0 | -    | 7.0  | 4.0  | 1.0  | -          |

\* 대체율은 상시노동자 평균소득 대비 수준. 적용범위는 65세 이상 인구 중 비율.

자료: OECD (2021). 125쪽.

## 6. 연금개혁 방향: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지금까지 1~4차 재정추계에서 연금개혁안은 모수개혁 틀에서 진행되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종종 나온다(오건호 2021; 이용하 2022).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이 워낙 커서 고강도 재정균형 조치가 필요하고, 기초연금은 노인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급대상, 급여수준, 급여구조 등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구조개혁은 변동 폭이 크기에 바로 시행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아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제도 불신을 키울 수도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담은 모수개혁을 추진하고 중장기 시야에서 연금제도의 비전을 담은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이후 토론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1) 모수개혁 방향

우선 모수개혁의 핵심 과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노후빈곤 개선이다. 일부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나 이는 지금도 수지격차가 큰 상황에서 추가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되는 일이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현행 국민연금 40% 소득대체율에 부합하는 수지균형 보험료가 20%에 근접한다(기금수익률 할인 수익비 2.1~2.2배 적용). 이에 5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을 12%까지 인상하여 수지불균형을 일부 개선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노동시장 주변부에 있거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가입기간을 늘려 실질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재 사각지대를 개선하면서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출산/실업/군복무 크레딧을 강화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며, 도시 지역 가입자에게도 농어민에 준하여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60~64세의 고용률이 60% 수준이어서 의무가입연령 상향도 검토할 수 있다.<sup>7)</sup>

기초연금은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될 필요가 있다. <표 6>에서 보았듯이, 기초연금 금액이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급여 수준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기초연금의 인상은 현재 노인의 불충한 소득을 보완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미 2022년 대선에서 유력후보들이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을 약속하고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설정되어 있어서 조만간 기초연금 인상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이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더 오르면 국민연금 가입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최옥금 2020: 134-136).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제도라는 점,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순혜택이 여전히 크다는 점, 기초연금 선정 소득인정액에서 국민연금액은 일부라는 점, 기초연금 적용에서 경계에 위치할 중간계층 가입자들은 노후준비에 적극적이라는 점, 국민연금 가입과 기초연금 수급 시점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sup>8)</sup>

## 2) 구조개혁 방향

단기적으로 모수개혁안을 설계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구조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모수개혁은 지체된 연금개혁의 문을 여는 의미를 지니지만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기초연금도 인구 변화에 맞추어 재정립되어야 하며, 퇴직연금도 노후연금으로 역할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구조개혁은 보장성에서 세 개 법정 연금을 통해 계층별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지향하고, 지속가능성에서 국민연금의 수지균형과 기초연금의 지출 관리에 나서야 한다.

<표 7> 연금 구조개혁의 기본 방향

| 목표        | 핵심 과제                 |
|-----------|-----------------------|
| 노후소득보장    |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
| 재정적 지속가능성 | 국민연금 수지균형, 기초연금 재정 관리 |

자료: 오건호(2021). 145쪽.

우선 기초연금은 중하위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노후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한다. 이 때 최저보장소득의 소득대체율은 OECD 회원국의 최저보장소득 평균을 준거로 삼아 중위소득 40%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19%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3만원으로 1인가구 중위소득 40%(70만원)와 엇비슷하다. 또한 최저보장소득은 현행 기초연금처럼 인구 비율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액이 점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할

7) 현재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은 연금 수령 시점에 가입기간이 합산되기에 사실상 후세대가 재정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이에 크레딧제도에서 일반회계 지원은 연금 지급시점이 아니라 발생시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8) 이에 대한 필자의 언론 칼럼을 참조하라. “기초연금 오르면 국민연금 회피? (경향신문 칼럼 2022.4.28.)

것이다. 보통 외국의 최저보장소득 하위계층에 한정하여 운영되지만 한국에서 적용 대상은 중간계층이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점, 국민연금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보다 넓을 수 있다.<sup>9)</sup>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지균형 체제로 나아간다. 그런데 이를 위한 수지균형 보험료율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에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30%로 낮추고 급여구조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는 구조개혁 방안이 제안되지만(최병호/강성호 2019; 이용하 2022; 김상호 2022), 급여 인하 폭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 논의되기는 어려우리라 판단한다.<sup>10)</sup> 구조개혁에서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고 급여구조도 가입자 수용성을 감안하여 현행 방식을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을 설계하면, 수지균형 필요보험료율은 약 20%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현세대 가입자가 책임지는 보험료율을 15%로 설정하고 나머지 5%는 후세대에게 의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처럼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높으면 장기 가입한 중심권 취업자일수록 국민연금 순혜택을 많이 얻기에 국민연금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 보전이 역진적 성격을 지니지만(오건호 외 2019: 72-73), 보험료율 15% 수준에서는 상위소득자 수익비가 1배 수준으로 조정되어 역진성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되거나 기금수익 변화에 따라 현세대와 후세대의 재정 책임 몫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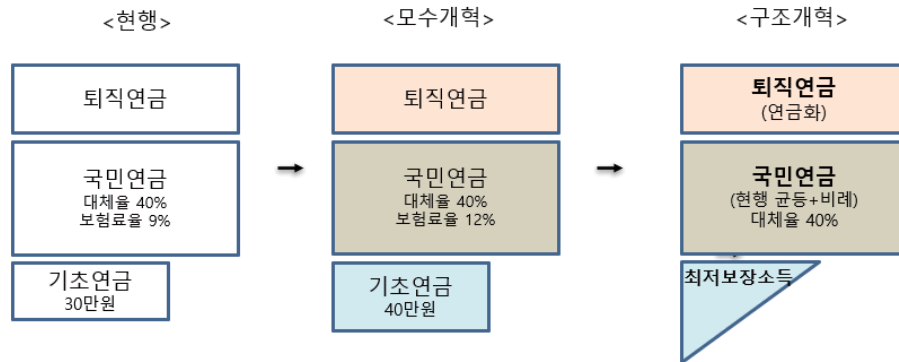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제도이다. 앞으로 계층별 다층연금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간계층 이상 가입자에게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한 층으로 기능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사적부문에서 운영되지만 법정 제도라는 점에서 준공적연금으로 볼 수 있으며 기여율이 월 소득의 8.33%여서 소득대체율로 따지면 15%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으로 퇴직연금은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적용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간해지를 엄격히 제한하여 적립금을 쌓도록 하며, 은퇴 시에는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퇴직연금의 운용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거나, 소득비례형 제2 공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양재진 2021).

9) 기초연금, 최저보장소득도 후세대에게 재정을 의존하지만 국민연금 적자보전을 위한 재정보다는 재분배 성격을 지니므로 재정 지원의 정당성이 높다. 또한 실시간 소득과약체계가 구축되면 사실상 국민연금 가입 회피가 어렵기에 최저보장소득과 국민연금은 병존할 수 있을 것이다.

10) 최병호/강성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0%, 이용하는 25%, 김상호는 30%를 제안한다.



[그림 4] 모수·구조개혁 방향



자료: 오건호(2021). 151쪽 그림 재구성.

[그림 4]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이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는 국민연금의 미래 지급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제시하여 가입자의 신뢰를 증진한다. 또한 국민연금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에서도 세대간 형평성을 개선하리라 기대한다. 보장성은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을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하여 계층별 노후소득보장의 평탄화를 추진한다.

## 7. 맺으며: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중장기 개혁 비전

2007년 노무현정부의 연금 개혁 이후 15년 동안 국민연금 제도는 그대로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가 미루어질수록 이후 개혁 과제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2022년 대선에서 연금개혁 주제가 부상한 계기를 놓치지 말고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이 발표문은 국민연금 재정을 둘러싼 논점을 살펴보고 향후 연금개혁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오랫동안 연금개혁을 두고 입장이 달라지는 핵심 이유가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 있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둘러싼 논점에 대하여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토론하며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연금재정 수지, 미래 재정전망 등)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도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70년 장기 추계에 대한 불신 혹은 오해를 해소하도록 재정계산의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시민들이 재정계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만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 미래 재정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형 적립배율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부과방식 전환의 현실성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넷째, 연금개혁의 시야를 국민연금 중심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로 확장해야 한다. 이는 세 법정 연금을 종합하여 계층별로 노후보장을 도모하는 일이다.



다섯째, 단기적인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개혁의 방향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구조개혁은 가입과 수급이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국민연금에서 미래 발전 경로를 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2017). [국민연금의 발전적 재구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국민연금공단(2018). [2018 국민연금 바로보기: 국민연금을 말하다].
- 국민연금연구원(2018). “국민연금 수익비 분석” (윤소하의원 요구자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8).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2018).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 김상호(2022).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공적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 2022년 공동국제세미나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축] (2022.5.19.)
- 보건복지부(2003).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2003.8.19.).
- 보건복지부(2018).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 양재진(2020).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실행 방안”. 양재진, 최기흥, 오건호, 이정우, 윤석명. 『한국 노후소득 보장제도 재평가와 합리화 실천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양재진(2021). “현 퇴직연금제도의 한계와 준공적연금화 전략”.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토론회: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오건호, 김수완, 김수현, 남재욱, 오승연, 이다미(2019). 한국의 연금 진단과 계층별 노후소득보장.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 오건호(2021). “한국 노후소득보장의 재구조화 연구: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4).
- 오건호(2022). “5차 재정계산 대비 주요 논점과 재정안정화 방안” [연금포럼] Vol. 85. 국민연금연구원.
- 오건호(2022). “현단계 공적연금 개혁방안 모색” (이슈페이퍼 2022-4),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이다미(2019). “유럽 주요국의 연금제도 변화와 빈곤 측면에서의 성과 비교연구: 노동시장 구조와의 결합”. <한국사회정책> 26(3). 251-285.
- 이상은(2022). “기초연금의 성격과 개혁 방향”.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세미나 자료] (2022.3.3.)
- 이용하(2022). “국민연금 개혁방향: 재구조화·다층화”. [공적연금 개혁방안 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3.4.).
- 참여연대(2018).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참여연대 연금개혁안” (2018.12.31.).
- 최병호·강성호 (2019).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재정정책논집. 21(4). 141-177.
- 최옥금(2020).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과 발전방향]. 국민연금연구원.
- ILO(1998). Internal guideline for the actuarial analysis of a national social security pension scheme. ILO FACTS. Geneva: ILO.
- OECD(2021). *Pension at a Glance 2021*.
- Office of the Chief Actuary(2019). *Actuarial Report (30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Ottawa: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 Swedish Pensions Agency(2019). *Orange report: Annual Report of the Swedish Pension System 2019*. Swedish Pensions Agency.
- Tikanmaki H., Lappo S., Merila V., Nopola T., Reipas K., Sankala S.(2019). *Statutory pensions in Finland: long-term projections 2019*. Finnish Centre for Pensions.

[토 론 문]

김 원 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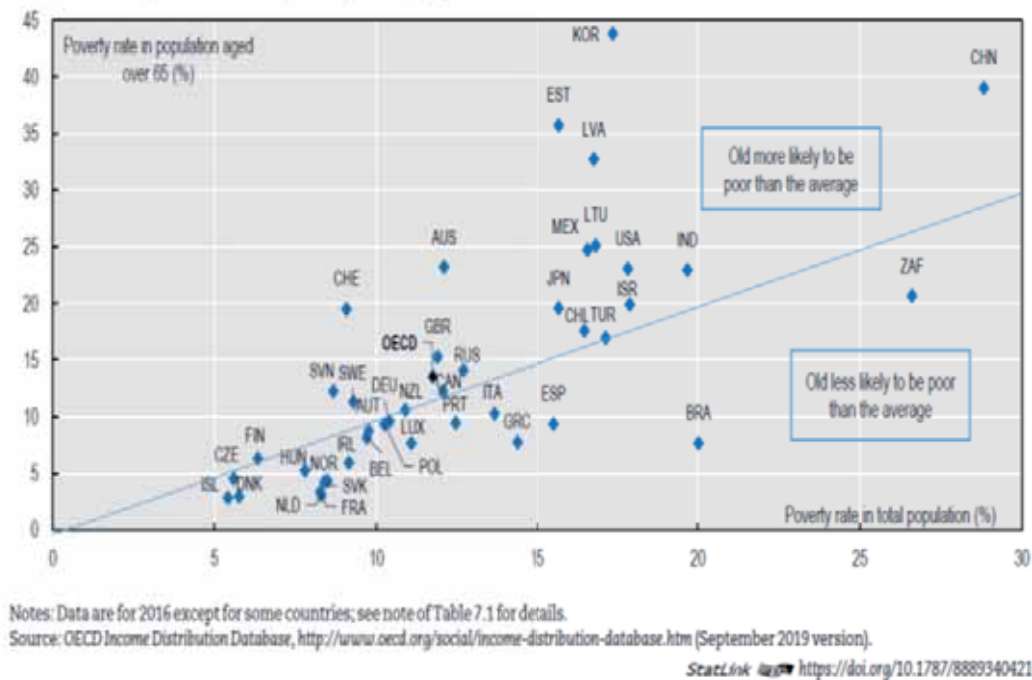


전 사회를 마비시킨 코비드19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마지막 위기는 아니다. 다가오는 또 다른 위기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이다. 고령사회는 경제, 정치,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이슈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중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급속히 늘어난 노인들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토론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성격을 알아보고, 이에 대응한 연금제도의 현황, 그리고 바람직한 연금제도의 대안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제도로서 노년으로 인한 근로활동 제약이 초래하는 소득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연금제도가 없다면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사회적 부의 분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빈곤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연금급여를 개선하여 노인에게 부를 이전하여 왔다. 이에 반해, 한국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제도는 상당히 늦게 도입하였으면, 그나마 이 이후에도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오히려 삭감하는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결과 우리나라는 높은 노인빈곤율에 시달리게 되었다. 2016년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에서 최고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3.5% 보다 월등히 높은 43.8%에 이른다 (<그림 1>). 이는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사회적 부의 분배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1> OECD 국가의 빈곤율과 노인빈곤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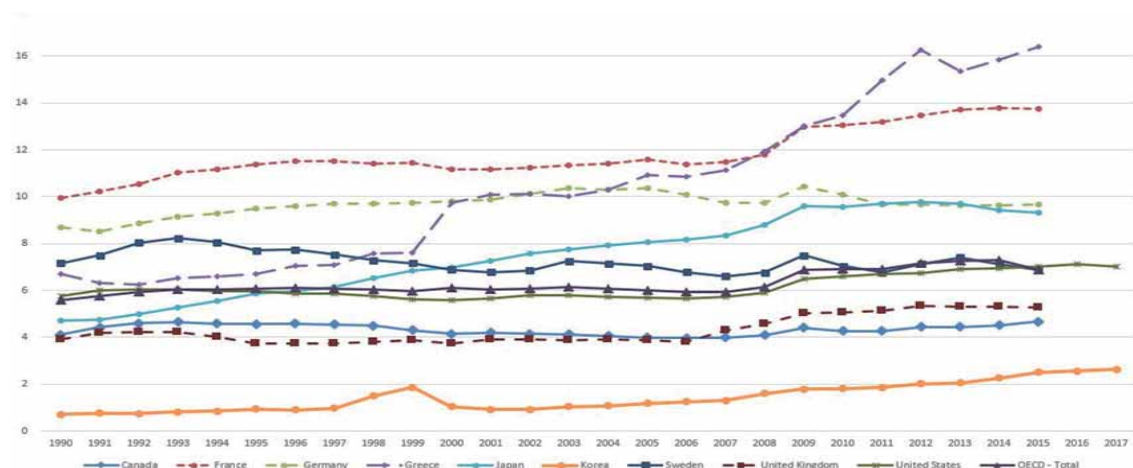


자료: OECD, 2019: 187

높은 노인빈곤 원인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65~69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OECD 국가의 평균치인 22.3%보다 두배 가량 높은 편으로 노인들의 근로활동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OECD 2019, 177). 반면, 2015년 우리나라의 연금지출은 GDP 대비 2.9%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GDP 대비 8%의 36%에 불과하다(OECD 2019). 이러한 사실은 심각한 노인빈곤이 부실한 연금제도에 기인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2> OECD 국가의 연금지출의 추이

자료: OECD, Stat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외연적으로는 다층적으로 잘 발달해 있다. 1층에는 1988년 도입된 사회보험식 국민연금, 2층에는 강제가입 퇴직금을 대체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이, 3층에는 개인연금이 1994년 도입되어 상당한 세제혜택으로 자발적 가입을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 완결성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이들 중 어떤 연금제도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층연금제도의 중추인 국민연금제도는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18세부터 59세 사이 전체 근로가능인구의 55%(특수직역포함 60.5%)만을 가입시키고 있다. 27%에 달하는 주로 여성으로 이루어진 비경제활동인구는 적용제외되어 있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지역가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입은 하였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이거나 장기 체납자이다(국민연금연구원 2021). 국민연금은 가입의 사각지대뿐 아니라 급여의 사각지대 즉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수급자의 비중은 노령, 유족, 장애연금수급자를 모두 합해도 46.8%에 그친다(최옥금 2022). 이에 더하여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평균 급여수준은 2021년 현재 월 55만원으로 매우 낮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급여의 분포이다. 국민연금의 급여분포는 좌상향의 형태로 2021년 월 100만원 이상 급여액 수급자는 전체의 7.3%에 불과하고, 월 40만원 이하 저연금액 수급자는 60.8%에 달한다(최옥금 2022). 급여수준과 급여분포는 향후에도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제도는 상당히 많은 노인들에게 연금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생계유지에 부족한 낮은 수준의 급여만을 제공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 및 급여 사각지대는 다층연금제도 내의 사적연금제도에 의해 보충되지 않는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만을 강제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근로활동인구의 상위 25% 정도의 근로자들만 가입시키고 있다. 더구나, 퇴직연금에서는 일시금계좌의 비율이 96.7%로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수급하여 노후소득이 아닌 사업비용충당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개인연금 역시 가입율은 11.9%로 낮지 않으나 평균적 수령기간은 6.7년에 불과하다(정성희 외, 2020, 4). 즉 개인연금은 소득보장의 기능보다는 상위소득자들을 위한 절세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에도 노인빈곤의 해결은 공적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 연금제도의 부실함을 그나마 보완해주고 있는 제도는 기초연금제도이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도로 도입된 현재의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의 소득하위

70%에게 최대 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부부일 경우 20% 감액, 실제로는 노인의 약 66.7%에게 지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감액된 급여를 받게 된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연계로 인한 감액급여의 수급자는 6.5% 정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정액급여로 운영되고 있다(최옥금 2022: 8).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실증된 바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은 노인빈곤을 획기적으로 낮추기에는 충분하지는 않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면 절대빈곤율을 31.1%에서 24.3%로 상대빈곤율을 46.7%에서 42.7%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국민연금연구원 2016). 요약하면 한국의 다층연금제도는 급여와 적용의 사각지대로 인해 연금제도 본연의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이래 여러 번의 연금개혁이 있었으나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5%에서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지난 연금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개혁에서는 제도의 존재 이유인 노후소득보장 제공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선시되어 왔던 연금재정안정화 목표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을 장기적 수행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제도적 조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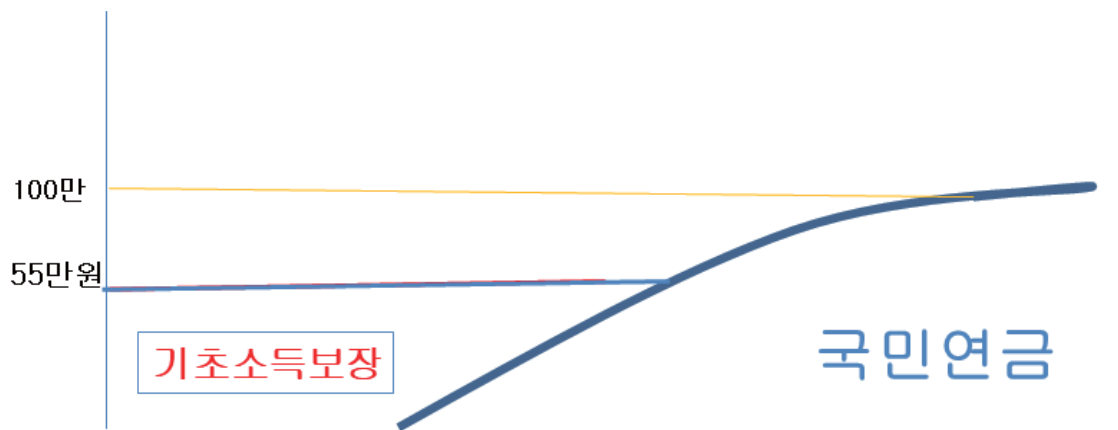
연금개혁의 이러한 목표 하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연금개혁방식인 국민연금중심 접근과 기초연금중심 접근을 평가해 볼 수 있다. 먼저, 국민연금중심 접근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을 대다수 노인들에게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발전시키고, 기초연금은 최저소득보장과 같은 사회부조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오건호 박사의 구조개혁방안도 여기에 속한다. 이 접근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연금크레딧이나 보험료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강화모델을 제시한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소득기반 사회보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득파악의 정확성을 높여 국민연금의 적용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대신, 기초연금의 포괄범위는 축소하여 급여를 저소득층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 접근은 사회보험제도가 가지는 장점인 근로유인의 강화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강점을 가진다. 하지만 이 접근은 소득보장의 관점에서는 중대한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이 접근은 국민연금의 급여 사각지대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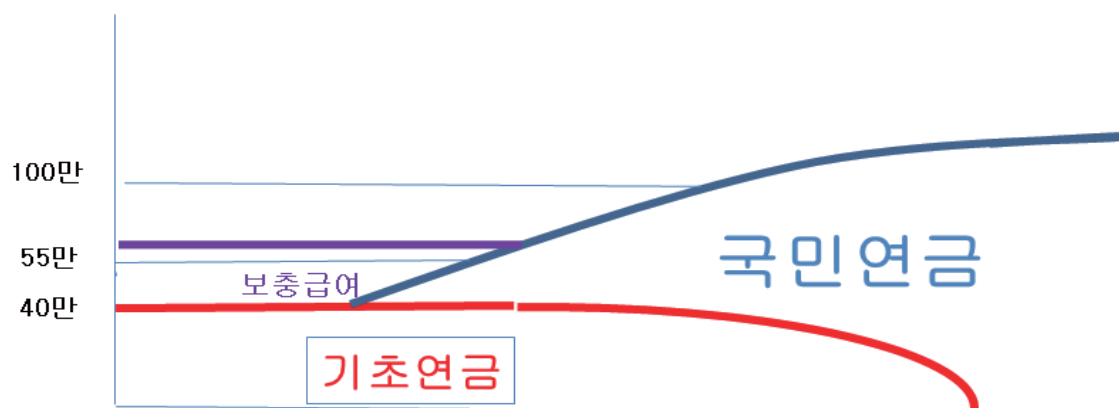
즉 저급여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빈곤선 이하의 연금액을 받는 대다수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을 추가적으로 받지 못한다면 이들이 빈곤을 벗어날 기회는 제한되는 것이다. 둘째,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접근은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유인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대체하여 도입될 최저소득보장연금은 최저생계비 55만원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의 60% 이상으로 추정되는 저급여수급자들은 10년 이상을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연금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연금액을 수급하게 된다. 이런 제도적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유인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셋째, 설사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도입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적용사각지대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회보험제도는 주로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가입의 전제로 한다. 하지만 한국의 고용구조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전체 경제활동가능인구의 30%로 매우 크다. 더구나 고용에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현재에도 클 뿐 아니라, 향후에는 비정형근로의 확대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들을 사회보험이 다 포괄할 수 있다는 전망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넷째, 한국과 같이 빈곤한 노인의 수가 많은 경우, 가난한 노인 모두에게 최저소득보장연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재정적인 절감효과도 기대보다 크기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대안은 결과적으로 노후소득보장에서 사회부조의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연금소득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댈 수밖에 없는 국가의 부조가 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사회적 참여는 현저히 저해될 수밖에 없고, 이는 노인들의 사회적 시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3> 국민연금 중심 접근과 최저연금보장제도 도입



이에 비해, 기초연금중심 접근은 국민연금제도를 현행으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12%(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기준)에서 15% 이상(40~50만원)으로 인상하고, 포괄범위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접근은 우선 노후소득보장의 가장 큰 문제인 공적연금의 급여사각지대의 해결에 효과적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기초연금도 동시에 수급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저급여 문제는 거의 해결된다.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 자영업자, 비정형근로자들과 같이 국민연금이 포괄하기 어려운 사람들 또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급여인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기초연금이 사회부조가 아니라 보편적 급여로 정착되기 때문에 권리성이 강화되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접근의 단점은 재정소요가 크다는 점이다. 또한, 기초연금만을 수급하는 국민연금 미수급자들의 경우 급여가 여전히 충분치 않은 문제가 남는다.

<그림4> 노후소득의 중층보장모델



연금제도의 우선적인 목표인 노후소득보장 관점에서 위의 두 접근을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중심 접근보다는 기초연금중심 접근이 노인빈곤 완화에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중심 접근도 아래의 두 가지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연금 미수급자의 부족한 급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보충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예상되는 재정문제에 대비해 연금지출의 규모를 일정선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연금지출의 적정규모

는 전체 경제 규모에서 연금지출의 비중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OECD 국가 연금지출의 평균수준이 지출의 장기적 제한선으로 유용할 수 있다. 지출의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하향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주장하는 보완된 기초연금 중심 접근에서는 국민연금수급자 모두가 기초연금도 중층적으로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수급자의 급여를 삭감하더라도 이들의 공적연금 총급여액(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한 연금액)은 상향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급여하향은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상향하기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보험료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상위 20% 소득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claw back제도를 통해 환수한다.

추계결과에 따르면, 개혁 모델의 예상 소요 재정의 규모는 2030년에 GDP 6.9%(기초 2.9%, 보충 0.4%, 국민 2.4%), 그리고 2040년에는 8.65%(기초 4.2%, 보충 0.75%, 국민 3.7%)로 추정된다(김원섭 외, 2016). 공무원연금의 포함하더라도 2040년의 연금지출은 GDP의 11% 정도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을 예상된다. 2040년 OECD 국가의 연금지출의 평균이 GDP의 11.2%로 추정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재정적 소요가 과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과 새롭게 도입되는 보충급여는 재정기반 급여이기 때문에 사회보험기반 급여와 달리 재정적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모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연금제도를 유지한다면, 인구고령화의 진전은 대량의 노인빈곤을 유발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우리나라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불공정은 평생을 사회의 번영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린 노인들이 스스로의 노력의 산물이기도 한 사회의 번영에 배제되어 빈곤하고 비참한 일상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의 연금개혁은 이러한 불공정을 시급히 시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OECD, 2019, Pension at Glance, OECD

국민연금연구원, 2020, 2019 국민연금생생통계, 국민연금연구원

김원섭, 강성호, 김형수, 이용하, 2016,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중층보장체계로의 재구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2(4): 1-29

정성희, 송윤아, 강성호, 기승도, 장윤미, 2020,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Ⅱ) - 사회안전망, 보험연  
구원 CEO 리포터 20-06

최옥금, 2022, 기초연금 수준과 국민연금 관계에 대한 소고, 2022년 한국연금학회 추계학술대  
회 발표문. 2022.06.9.

## [토 론 문]

### 강 상 호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연금학회 정책이사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 민간위원





## 전반적 의견

- 동 발표자료는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개혁을 논하기 위해,
  - ① 국민연금제도의 수지불균형을 통해 재정문제를 진단한 후
  - ② 그동안 재정추계를 둘러싼 논점으로 추계기간과 기금수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③ 또한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관련하여 적립배율 1배의 의미와 미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고,
  - ④ 나아가 국민연금 중심의 연금개혁 논의를 확대하여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연금체계와 최저노후소득보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 ⑤ 끝으로 연금개혁 방향으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언급하면서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봄
-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국민연금의 재정문제,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 이번 연금개혁과정에서는 기초연금을 재구조화하고,
  -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이해되며,
  - 발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함

## I. 세부 의견

### 1. 공사역할 분담 구조 마련 및 노후소득보장 개혁 방향 결정

#### 가. 공사역할 분담 구조 마련

- 공사연금 간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과 관리 조직 구성을 통해 사적 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함
  -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의 목표소득대체율(예, 70%)을 논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사연금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사연금 제도 간 연계와 종합적 대책마련을 위해 이를 관리 감독할 컨트롤타워(예, 대통령 혹은 총리실 산하 전담조직)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나. 노후소득보장 개혁 방향 결정

- 공적연금 개혁방향 선택 : 모수개혁 vs. 구조개혁

□ 모수개혁(현행 제도+점진적 개선)의 장·단점 검토

- (정책안) 보험료율 인상, 급여조정 등
- (장단점) 장기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나, 현노인계층의 빈곤문제 해소 한계, 저소득층 보험료부담 증가, 지속적으로 노후소득제도 개선 필요

□ 구조개혁(현행 연금체계의 전면적 개편)의 장·단점 검토

- (정책안)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전면 개편(예, 스웨덴 NDC 방식, 기초연금으로 일원화 등)
- (장단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는 기여하나 노후소득보장 한계, 다른 측면에서 추가재원 발생(예, 기초연금 재원 급증) 등 우려
  - 개혁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로 아무런 제도개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모수개혁 중심으로 하되 제도간 효율적 연계가 현실적

-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존중한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역할 재조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 및 일원화 등
- 사적연금: 가입률 제고 및 연금화 유도, 공적연금과 연계성 강화

## 2. 공적연금 개혁

□ 세대간 수급불균형과 재정안정화 등을 해소/완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증가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 저연금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 (보험료 상향) 특히,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액 삭감에 초점을 두었고 이로 인해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 상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보험료율을 상향하되 과거와 같이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조정하면 제도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다층노후체계) 국민연금의 저연금화 문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해 갈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기초연금 확대는 결국 일반재원을 통해 마련되어야 하므로 국가채무 확대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도입과정에서 현 노인세대의 빈곤문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였고, 국민연금의 균등부분과 역할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두 제도 간 재구조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재구조화 과정에서 ①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에 대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②국민연금을 균등부분을 축소하여 소득비례 공적연금으로 변경하거나, ③ 기초연금 도입 시 고려한 국민연금 성숙 시에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자동조정장치) 지속적인 공적연금 재정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연금개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공적연금에 대해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사적연금 개혁

가. 사적연금(퇴직/개인연금)의 이슈

□ (가입) 퇴직연금, 개인연금 모두 가입율 및 유지율이 낮으며, 특히 저소득, 베이비부머 등 취약계층에서 낮은 가입율을 보임

○ (퇴직연금) 2020년말 퇴직연금 도입률<sup>1)</sup>과 가입률<sup>2)</sup>은 각각 27.2%, 52.4%이며<sup>3)</sup>,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낮음(가입률: 5인미만 11.9%, 300인이상 69.1%)

- (해지) 이직이 잦은 상황에서<sup>4)</sup> 이직 시 IRP계좌에 대한 해지율<sup>5)</sup>이 높아 개인별 퇴직연금의 적립 수준이 낮은 편임

\* (중도인출) 2020년 기준 중도인출 인원 6만 9천 명, 인출금액 2조 6천억 원 (적립금의 1%)<sup>6)</sup>

○ (연금저축) 2020년말 연금저축 가입률은 11.7%<sup>7)</sup>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가입율이 낮음 (2천만원 이하 0.1%, 8천만원 초과 57.1%)<sup>8)</sup>

- (유지 상태)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인출 가능하며, 장

1) 전체 사업장 대비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비율

2)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비율

3) 통계청 보도자료 (2021), 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4)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2019년 기준 6.7년임([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상용5인이상부분\)」](#))

5) IRP 해지인원은 2020년 기준 84만 명(해지금액 11조 원)으로 해지율은 이전 인원 대비 98.2%, 이전 금액 대비 72.9% (통계청 보도자료 (2021), 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6) 주택구입, 주거 임차 등 주택관련 중도인출이 62.6%이며, 매년 적립액의 1% 수준으로 퇴직연금 자산이 누수되고 있음

7) 과세대상 근로소득자 수 1,858만 명 중 가입자는 216만 명임(국세청(2021), 2021국세통계연보(2020년 기준)/sheet(13))

8) 총급여 2천만원 이하 가입자의 가입률은 2013년~2020년 동안 각각 1.17%, 0.8%, 0.4%, 0.3%, 0.3%, 0.2%, 0.2%, 0.1%로 꾸준히 감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참조)

기 보유가 높지 않은 편임 (10년 유지율은 52.4%)

□ (운용)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자산운용과 자산운용 환경의 불안정성으로 수익의 변동성이 크고 자산운용 환경은 단기적으로 불안정함

○ (퇴직연금) 2020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255조 원이고, 이 중 원리금보장에 86.1%(220조 원)가 투자되어 있으며<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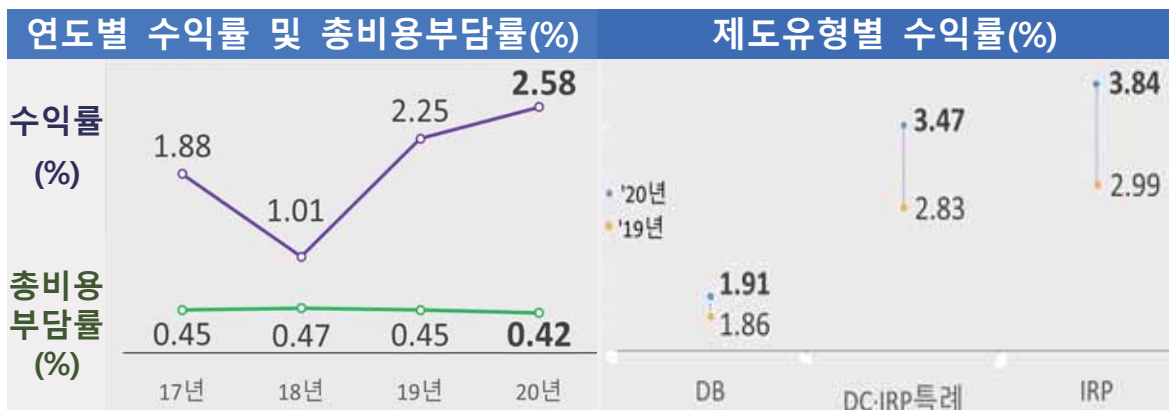
- 수익률은 전체 2.58%, 원리금보장 1.68%(실적배당형 10.67%)로 나타남<sup>10)</sup>

\* 연간수익률: ('17년) 1.88% → ('18년) 1.01% → ('19년) 2.25% → ('20년) 2.58%

\* 장기수익률: '20년 기준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각각 1.85%, 2.56%(원리금보장형 1.64%, 2.47%; 실적배당형 3.77%, 3.34%)

- '20년 총비용부담률<sup>11)</sup>은 0.42%로 나타남 ('19년 0.45%)

\* 권역별로 보면, 근로복지공단(0.07%)<sup>12)</sup>이 가장 낮았으며, 손해보험(0.34%), 생명보험(0.36%), 금융투자(0.41%), 은행(0.46%) 순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1.5.),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 한편, 주식시장 변동 등에 따라 실적배당형의 수익률도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자산운용 환경은 단기적으로 불안정함

- (퇴직연금)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17년의 경우 6.6%<sup>13)</sup>, '18년엔 주식

9) 실적배당형에 10.7%(27.2조원), 대기성자금 등에 3.2%(8.2조 원)가 투자됨(통계청 보도자료(2021), 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0)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4.5.),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11) 연간 총비용(=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총비용) ÷ 기말적립금

12)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정책적으로 운영(운용관리업무만 수행)함에 따라 수수료 수준이 일반 금융회사 대비 낮음

13) 2017년 주식형 비중(14.8%)이 낮아 KOSPI 지수가 21.8% 상승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실적배당형으로 투자된 투자금의 실적은 높지 못함

시장 하락으로 -3.82%였으며, '19년, '20년 각각 6.38%, 10.67%로 주식시장 변동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음

-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18년 △13.86% 감소한 후 '19년에 10.50% 증가함

□ (수령) 퇴직연금 수급대상자의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연금저축의 연금형태의 수령 시 수령기간이 짧음

○ (퇴직연금)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 수령 비율(계좌기준)은 3.3%('20년), 2.1%('18년), 1.9%('17년)로 연금수령 비율이 매우 낮음

- 특히, 적립금이 적을 경우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일시금 평균 1천 6백만 원)

○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자는 적은 편이고<sup>14)</sup>(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4.1%<sup>15)</sup>), 연금수령자의 대부분(89.3%)이 수령기간 10년 이하로 짧음<sup>16)</sup><sup>17)</sup>

\* 2015년 기준 연금저축 수령자 중 연금수령은 57.3%로 조사됨<sup>18)</sup>

□ (지원수준) 사적연금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sup>19)</sup>에 따라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함

○ 보험료(납부액)대비 연금세제 지원수준을 보면, OECD 주요국의 세제지원율은 약 26%로 추정되나<sup>20)</sup> 우리나라는 이 보다 상당히 낮은 편임

- 동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연금세제 지원 수준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각각 17%와 14%로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낮은 편임

## 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 (가입/연속성 강화) 가입 확대 및 (준)강제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유지율 제고를 통한 제도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4)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51.9%이며, 1,200만원(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초과 계약은 전체 2.2%에 불과함

15) 종신행(33.2%), 확정금액형(2.3%), 혼합형(0.2%)의 순

16) 10년 초과 건은 미미하게 증가 [( '17) 9.1% → ( '18) 9.8% → ( '19) 10.6% ]

17) 금융감독원(2018.4.9.), '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

18) 연금수령 유형별로 보면 종신행(33.9%), 미지정(7.1%), 확정금액형(1.6%), 혼합형(0.1%) 순임

19)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

20) OECD(2016), Pensions Outlook; 강성호·류건식·김동겸(2017),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보험연구원을 참고하여 정리하되, 26%는 OECD 국가 중 제시된 통계의 단순평균 값으로 산출함

- (자동가입 도입) 퇴직연금의 경우 선택적 탈퇴(OPT-OUT) 형태의 자동가입제도 (예, 영국의 Auto-Enrollment)를 도입하거나, 신규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 개인연금은 유지 기간이 길수록 세제 및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강화
  - 현행 근퇴법<sup>21)</sup> 상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sup>22)</sup>하는 조항에 대해 퇴직연금 도입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으로 변경할 필요
-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 퇴직연금을 조기에 도입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sup>23)</sup>
  - (운전경비 지원) 퇴직연금 의무화로 영세사업장 사업주 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액 중 운전경비에 충당되고 있는 수준만큼 대출금리 지원
  - (조기도입 시 인센티브) 조기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소규모 사업장<sup>24)</sup>에 대해서는 인센티브<sup>25)</sup> 제공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
- (중도인출 및 이직 시 해지 억제)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 및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연속성 강화를 통한 유지율 개선이 필요함
  - (중도인출) 사망, 영구장애 등 심각한 재무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sup>26)</sup>
  - (이직 시) 55세(혹은 60세 정년)까지는 이직하더라도 퇴직계좌(IRP 계좌)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함
  - \* (허용 시 담보대출 지원) 다만,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긴급자금 필요 시 담보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지급: 자동 연금화) 지급단계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시 원칙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제도화할 필요 있음
-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종신연금화를 의

21) 신규사업장에 대해 1년 이내 퇴직연금 설정을 하도록하고 있으나(퇴직급여법 제5조) 퇴직급여 미설정 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함(퇴직급여법 제11조)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23) 강성호·류건식·김동겸(2017),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24)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사업주가 많다는 점에서 사업주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류건식 외(2017),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보험연구원)

25) 사업주에 대한 수수료 지원 및 연금세제혜택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음.

26) \* 주요 선진국은 경제적 곤란 등 긴급자금수요 발생에 국한하여 중도인출을 허용함

- 미국 : 사망, 영구장애, 의료비 지출 등 중도인출 사유가 매우 제한적임

- 영국 : 건강상 퇴직, 기대여명 1년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 (기타 중도인출 시 55% 세율적용)

- 호주 : 영구 및 일시적 장애, 심각한 재무적 곤경 시에만 중도인출 허용

무화한 국가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Default Pension)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sup>27)</sup>

○ 현실적으로는 연금수령기준 조정<sup>28)</sup>, 연금지급방식 다양화<sup>29)</sup> 등을 통한 연금화 전 환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지원 강화) 연금세제 지원 확대(보조금 포함)로 가입을 유도하되, 퇴직일시금에 대한 공제수준을 낮추어 재정을 충당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에 지원(보조금 적용)이 강한 (가칭)공사연계연금(한국형 리스터연금)에 대한 도입과 세액공제금을 연금계좌로 환류하는 제도(계좌환류제)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칭)공사연계연금은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 가입 시 보조금 및 세제를 지원하는 공·사적 연금의 혼합 연금상품 도입 필요(한국형 리스터연금임)

\* (가칭)계좌환류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환급금이 자동으로 연금보험료로 납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sup>30)</sup> (수용성 제고 위해 Opt-out 고려) : 영국, 호주, 뉴질랜드 사례 고려

○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자에 대해 현행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예, 20%) 적용, 중고령층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제도(Catch-up plan)의 상시적용 등을 추진할 필요

-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세액공제율 15%를 2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50세 이상 사적연금 가입자에 대해 추가 세제혜택제도(Catch-up plan)를 상시적으로 적용하고<sup>31)</sup> 공제금액 및 세액공제율<sup>32)</sup>을 차등화(예,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20% 이상으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코로나 19와 같이 실업자,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퇴직자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노후자산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27) 각국의 사적연금 연금화 관련 내용은 ‘[oxera. The Retirement Income Market](#)’ (p2, p19, p56 참조); OECD(2015), Stocktaking of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in OECD and EU Countries, Page 14; 류건식·김동겸(2015), OECD 국가의 퇴직급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 테마진단, 보험연구원

28) 정년무화 연령(60세)을 고려하여 55세에서 60세 이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9) 영국의 소득인출형제, 일본의 일시금지급 숙려제도 등을 고려한 연금지급방식 다양화도 소비자 후생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30) 이때 무소득 배우자가 납부한 적격 개인연금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이를 허용함으로써 연금저축의 가입유인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31) 미국과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 우리나라 제도에 의하면, 2020년부터 3년 동안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연금세액공제 대상금액을 900만 원(50세 이하의 최대 700만원)까지 적용됨

32) 현재는 연령과 무관하게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15%, 5,500만 원 초과 소득자는 12% 적용

○ 다만, 재정문제 및 연금형태의 수령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시금 지급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가입 및 연금화 유도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sup>33)</sup>

---

33) 강성호(2017),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정책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국제보험산업심포지움, 파이낸셜뉴스·보험연구원.

[토론문]

주은선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한국 연금체계 개혁 방향’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의견

### <질문>

1. (재정문제) 후세대 부담론을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buffer fund 가 있는 국민연금의 부담을 우려하면서, 기금 없이 완전히 그때 그때 부과방식으로 재정조달을 해야하는 기초연금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후세대가 국민연금 급여는 감당할 수 없다면서 완충기금 없는 기초연금 부담은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2. (합리적 노후보장체계) 재정문제로 인해 만약 기초연금의 보편적 강화가 아닌, 기초연금의 보충소득보장 혹은 보충연금으로의 재편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적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제도 간의 정합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

- 적정 수준의 국민연금 급여가 제공될 때 제도 간의 정합성이 확보됨. 그러나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전망은 어두움, 그리고 노인기 추가 근로소득 확보는 불확실한 전망이며 고령노인에게는 더욱 어려움. 즉, 현재와 미래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빈곤 대응이 가능한 높은 수준의 최저보장제도와의 조합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상 없이 합리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성이 가능할까?)

- 일례로 2021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에서, 특례와 분할연금을 제외한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556,502원이었음. 급여액 분포를 보아도 노령연금 급여액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절반 이상(56.9%).

<표 1>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액 분포: 2021년 12월 말

(단위: 명, %.)

|                | 수급자 수            | 비중         |
|----------------|------------------|------------|
| <b>계</b>       | <b>4,826,096</b> | <b>100</b> |
| 20만원 미만        | 815,977          | 16.9       |
| 20만원~40만원 미만   | 1,929,015        | 40.0       |
| 40만원~60만원 미만   | 930,208          | 19.3       |
| 60만원~80만원 미만   | 449,857          | 9.3        |
| 80만원~100만원 미만  | 273,576          | 5.7        |
| 100만원~130만원 미만 | 249,115          | 5.2        |
| 130만원~160만원 미만 | 129,369          | 2.7        |
| 160만원~200만원 미만 | 47,624           | 1.0        |
| 200만원 이상       | 1,355            | 0.03       |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2:14.

- 이렇게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지금도, 그리고 상당 기간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발표자가 주장하는 대로 “기초연금은 중하위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노후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하며, 이 때 최저보장소득의 소득대체율은 OECD 회원국의 최저보장소득 평균을 준거로 삼아 중위소득 40%(약 70만원), 2020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19%를 목표로 삼는 것”이 가능할까? (정책 합리성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유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 특히 지역가입자, 불안정노동자 등의 국민연금가입률 제고와 향후 보험료 인상이 핵심과제인 상태에서, 즉 국민연금이 기로에 서있는 상황에서 소위 ‘맞춤형 정책’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책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됨. 즉, 국민연금 가입은 될 수 있으면 회피하여 소득비례연금액을 낮추고, 이를 관대한 비기여연금(혹은 선별급여)으로 보완하는 것이 개인에게 가장 수익성이 높다는 정책신호. 따라서 잘못하면 이 정책은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와 보험료 인상애 장애물이 될 것임. 이에 대한 반론은 충분한가?

- 타겟팅정책은 국민연금 인상과 패키지로 다루어질 필요 있음. 그럴 때 기여를 통해 급여자격을 획득하는 국민연금제도의 기반이 유지될 수 있으며, 장기적 빈곤률 감소, 빈곤갭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남.

3-1. (국민연금 급여수준) 재정문제만큼이나 급여수준 문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이렇게 계속 낮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는가? (빈곤예방 기능은 약하고, 빈곤에 대한 사후적 부분적 대응만 하는 노후보장체계)

- 빈곤예방 기능이 취약한 소득비례연금제도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노후빈곤에 대한 사후적 대응을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게 됨.

- 아래 표는 제도 정착기에 있는 국민연금이 현 노동세대에 대해서도 노후빈곤 예방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즉, 국민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이르러서도 제대로 된 수준의 노후보장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일부 세대에게는 가입기간 증가가 2007년 개혁의 명목소득대체율 하락의 효과를 상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

<표 1> 신규수급자와 전체수급자의 미래 실질소득대체율 예측치 비교 (단위: %)

| 지급사유 발생년도 | 매년도 신규수급자 | 전체수급자 |
|-----------|-----------|-------|
|           | 소득대체율     | 소득대체율 |
| 2020      | 24.2      | 22.4  |
| 2030      | 23.2      | 23.8  |
| 2040      | 22.0      | 23.4  |
| 2050      | 22.3      | 22.6  |
| 2060      | 24.9      | 22.8  |
| 2070      | 23.7      | 23.4  |
| 2080      | 24.0      | 24.0  |

자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 내부자료 필자가 재정리

- 위에서 제시한 노후소득보장 전망을 볼 때 국민연금은 제도발전 단계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확충하여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임.

3-2. (국민연금 급여수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자라는 주장. 보험료 지원이나 크레딧만으로 어느 정도로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가? 그걸로 정말 충분하다고 보는가? (기초연금의 보충적 방식으로 재편시 국민연금이 유일한 공적연금 소득원이 되는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임.)

4. (다층) 노동자 절반만 포괄하며 이미 일시금으로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가 어떻게 성장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퇴직급여제도를 갖지 못한 노동자의 나머지 절반과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퇴직급여를 가진 노동자의 절반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은 퇴직시점과 국민연금 수급시점 간의 간극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교연금으로서 역할을 더 강하게 요구받고 있음. 또한 지금부터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지급 금지 등 제도적 정비를 하여도 퇴직연금이 기능을 하려면 한 세대 이상 소요될 것인데 그 때까지는? 더욱 근본적으로, 기초연금과 퇴직급여제도는 정말 인구 충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하는가?

5. (다층)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는 dualistic welfare state 전망과 연결됨. 즉, 계층별로 서로 다른 복지체계에 기대는 복지국가를 의미하며, 특히 중간층과 상층에게 공적연금의 중요성은 크게 떨어짐. 그럼에도 이것이 한국 복지국가의 지향점으로 바람직한가? 이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연대 중심의 해법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6.(구조개혁) A값, B값 분리하는 구조개혁안은 저소득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이러한 단점을 넘어서는 장점이 있는가?

7. (재정) 왜 국민연금 재정지출 문제를 굳이 부과방식비용률을 통해서 제시하는가? GDP대비 지출비는 재정전망을 하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임에도 왜 GDP대비 지출비라는 지표는 외면하는가? 국민연금을 제한된 소수의 특혜받은 집단이 받는 제도로 한정하면서 가입자-수급자 내에서 분담을 완료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부과방식 비용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 공적연금의 본질이 세대 간 자원 이전을 통한 세대 간 부양이라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생산력 발전을 고려한 부양부담의 총량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적합함. 그 대표적인 지표는 생산세대가 산출한 부의 총량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율, 즉 GDP대비 지출비임. GDP의 약 30%에 불과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반의 확대 가능성 및 그 확대 필요성을 볼 때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부담을 제시하는 적절한 지표라고 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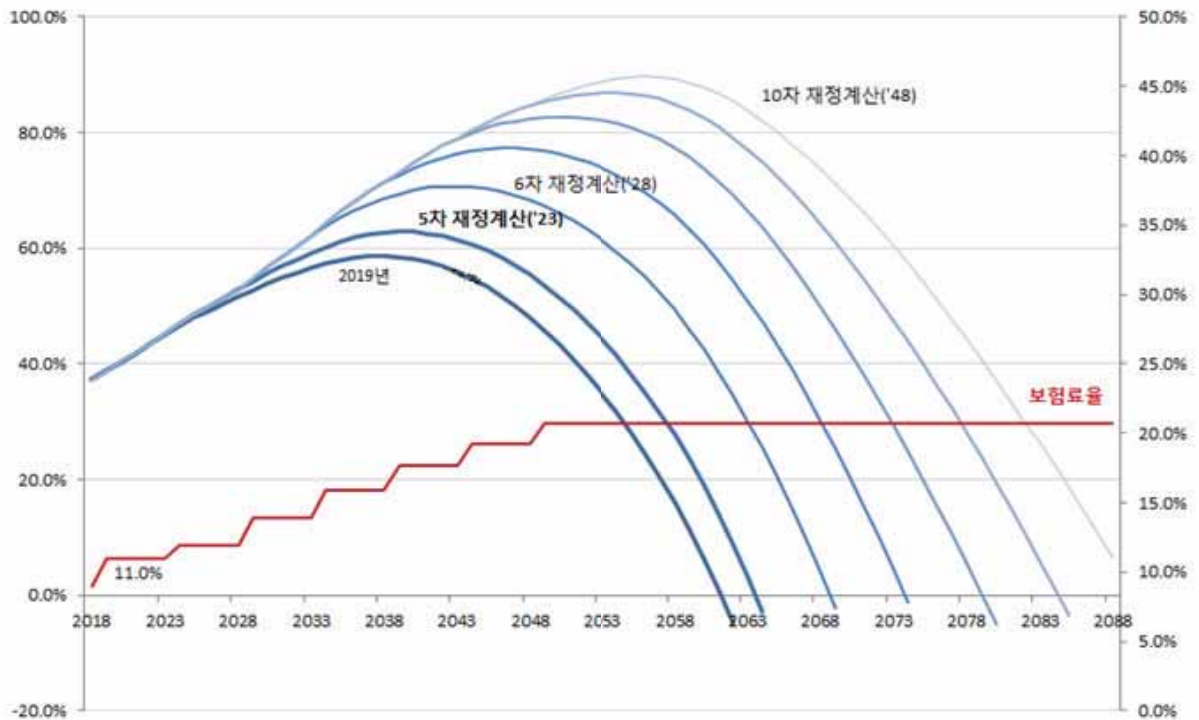
8. (재정) 50년 후의 생산력과 미래 사회의 부담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9. (재정) 왜 단계적 보험료율 조정 등과 같은 점진적인 재정안정조치들과 급여 인상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가?

예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인상. 각 재정추계 시점마다 매 5년 주기로 보험료율 조정의 가상안을 제출하고, 향후 필요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국민 합의 도출.

- 40년 후 적립배율 1배 가정

- 적립배율 1배는 적립기금의 운용 수입 활용과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까지를 대비한다는 성격으로 접근하며, 인구구조 안정화 이후에는 적립배율 목표 수정 가능



[그림 6]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GDP 대비 적립기금 비율 추이

1. (40년 이후 적립배율 1배)

자료: 정해식, 2022. “포용재정포럼 발표자료”.

## < 의견 >

1. 장기연금재정추계 결과는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됨. 경향성을 나타내지만, 가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함.

- 재정추계는 수리모형에 근거하여 ‘현재’의 시야에서 추정가능한 가정들을 투입하여 도출해낸 예측치(projection)로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장기추계를 통해 산출되는 결과는 투입되는 가정들에 의해 크게 달라지곤 한다. 단적으로, 3차 재정추계와 4차 재정추계에서의 경제성장률 가정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 결과 필요보험료율 역시 크게 달라졌다. : 기금소진연도(부과방식 전환 시기) 역시 향후 30~40년에 걸친 기금수익률 가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 가정이 달라지면서 매번 추계시 제도에 요구되는 바가 달라지는데 그에 맞춰 제도를 모두 바꿔야 하는가? 그게 설득력이 있는가?

- 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이란 지표 역시 장기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지출 조

정 조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 지표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공적연금의 본질이 세대간 자원 이전을 통한 세대 간 부양이라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생산력 발전을 고려한 부양부담의 총량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 대표적인 지표는 생산세대가 산출한 부의 총량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율, 즉 GDP대비 지출비이다. 이 전망치를 통해 부양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소득대체율 인상시 국민연금 지출 전망은 아래 <표 3>과 같다. 해당 시기 노인인구 비중과 현재 복지국가들의 연금지출 규모로 볼 때, 기준소득대체율을 45%, 50%로 인상할 경우에 국민연금 지출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판단되지 않는다. 이 지표 역시 수급연령과 같은 장기적인 지출 조정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물론 절대적이지 않다.

: 생산력 발전에 따라 정작 중요한 것은 부의 양이 아니라 분배의 질서가 될 것이다.

<표 3> 명목소득대체율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지출 전망

(GDP 대비 비중, 단위: %)

| 연도   | 40% | 45% | 50%  |
|------|-----|-----|------|
| 2021 | 1.6 | 1.6 | 1.6  |
| 2028 | 2.3 | 2.3 | 2.3  |
| 2030 | 2.5 | 2.5 | 2.5  |
| 2040 | 4.1 | 4.3 | 4.4  |
| 2050 | 5.8 | 6.1 | 6.5  |
| 2060 | 7.5 | 8.1 | 8.8  |
| 2070 | 8.9 | 9.9 | 10.9 |

주: 45%, 50% 소득대체율은 산식에 2021년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경사노위 연금특위 내부 논의 자료(2020)

- 인구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는 장기적 시야에서 점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이에선 단기/중기/장기 계획에 의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

- 여러 세대에 걸친 안정적인 보장수준 유지나 적절성이라는 우선적인 가치를 재정 안정성을 위해 미리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 제도의 존재 의의를 침해하는 수준의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 수입 조정

- 보험료율 인상: 일단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제도 보장성 강화(소득대체율 하락 중단)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제안된 바 있다. 2020년대 보험료 인상은 소위

재정수지 전환 연도와 기금고갈 연도를 뒤로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 보험료를 조정은 한 번에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인구, 경제성장, 고용, 연기금 운용성과 등에 따라 그 시기와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이후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즉, 2020년대에 보험료 인상이 수행된 이후에도 일정한 수준까지 계속될 수 있다.

- 보험료를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가늠자는 향후 30년의 재정상태 진단으로 보험료를 인상을 빠르게 더 큰 폭으로 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다만 늦어도 수지 차가 발생하기 직전부터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 추후 보험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 이는 총량적 지출수준에 따라 설정

-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을 없애되 급여상한을 도입하는 조치: 이 역시 상당한 재정 안정 효과와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

- 보험료부과소득 상한의 대폭 상향 조정 혹은 상한 제거 (동시에, 급여 상한 설정)

: 2017년 말 기준 소득월액 상한이 적용되는 사업장가입자가 17.8%에 이를 정도로 상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상한이 낮게 설정될 경우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더 적은 보험료를 부담으로 고용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 보험료부과소득 상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조정하는 것은 급여상한을 수반.

- A값 인상으로 인한 급여인상 효과 역시 우리 사회의 소득수준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 사용자 부담금의 소득상한만 건강보험 수준으로 올릴 경우, 2016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면, 이 경우 국민연금 연간 보험료 수입의 약 10%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불평등 심화와 보험료 부과 누진성 강화 방안

-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더 무겁게 만들므로, 보험료의 비례적 성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고령노동자의 보험료를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보험료 지원 방식을 고려

- 보험료 노사분담 비율 조정

- 조세재원의 역할: 수급률이 높아지는 2050년 이후에는 재정 일부에 대한 조세지원을 고려할만하다. 일정 시점부터는 각종 크레딧 제공을 사전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다. 또한 수급률이 높아지고, 보험료율이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서는 시점이 되면 취약집단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험료 부담에 한계를 부과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함.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보험료 지출 부족분을 조세로 충당(보험료 면제제도로 인한 부족액이 큼)하는 경우 많은데, 독일의 경우 '07년에 GDP의 10.4%를 연금으로 지출했지만 보험료 수입은 7.2%, GDP의 3.2%를 조세로 충당하였고, 이 추세는 206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 한다.

## (2) 지출조정

- 정년 연장과 수급연령 조정: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수명 변화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수급연령 조정과 함께 가입연령 역시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지금의 연금재정 예측치를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변화 요인이다.

-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비용은 총량적 파악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재정문제는 고령화로 인한 소득보장 재정문제의 일부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에 대한 기타 보충적 소득보장장치)의 재정문제를 합쳐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보험료 재정부담을 낮출 때 기초연금, 공공부조 등을 위한 일반재정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sup>1)</sup>. 더 큰 틀에서는 공적 노후소득보장 재정 수준을 낮출 때, 사적연금의 재정조성 및 지출 비중은 커지게 된다.

- 사회보험재정이 가지는 기여와 급여의 연계성, 사용자 책임의 요소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은 계속 재정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료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보험재정의 이러한 특성에 상당부분 힘입은 것이다. 또한 사적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 기타

- 국민연금은 미래 안정적 자원동원 능력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 재정안정 대책이며, 기금적립 증가가 근본적 재정안정 대책은 아니다. 즉,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예정하는 공적연금이 기금고갈연도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속적인 안정적인 자원 동원 능력이 더 중요하며, 오히려 과도한 기금적립은 국민경제에 부작용을 야기한다.

- 더 근본적으로는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GDP(총량적 부), 경제활동참여율,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추이, 평균수명 등의 요소에 달려있다. 궁극적으로는 순조

---

1)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문제에서 기초연금 역시 예외가 아님. 조세재원 역시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완충기금의 부재로 인해 그 부담은 더욱 직접적이 될 수 있음.



롭게 성장하며 노동소득분배가 잘 되며 이에 따라 출산과 사회진출이 순조로운 사회일 때 공적연금 역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다. ‘사회의 질 = 공적연금 지속가능성’<sup>2)</sup>

---

2)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지속가능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 아동, 청년에 대한 교육, 보건의료, 돌봄, 주거, 고용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사회가 자신을 키웠고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고 느껴야 청장년층이 앞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부양을 받아들일 것임. 즉, 복지를 받은 경험이 복지를 위한 지출을 낼 것임. 지금처럼 공교육보다 사교육 선호, 계층 간 뚜렷이 차별화되고 있는 돌봄과 양육, 계층재생산 구조 고착은 복지지출 확대를 불가능하게 할 것임. 비슷한 얘기지만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를 통해 계층 간 격차 축소를 하는 것이 공적연금 지속에도 도움이 됨. 고학력 경쟁이 아니라 유아기 교육에서부터 공교육의 질 제고에 충분히 투자하고 이를 통해 계층 간 격차 줄여야 함.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8)이 연금개혁은 유아기에 관한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정한 것임. 마지막으로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한 여성/남성, 청년/노인세대에 대한 일자리 재분배 역시 공적연금 지속성 제고에 도움이 됨.



## 부 록

- ◆ 연구회 소개
-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공지사향
- ◆ 협력기관

## ■ 연구회 소개 ■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http://www.sswkorea.org)

#### ● 설립목적 :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 ● 연 혁 :

- 2009. 10. 15 창립
-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법인설립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2013~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여/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2015-001578)
- 2009. 10~ 분기별 복지 현안정책 토론회 개최
- 2014~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참가
- 2015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2016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통일부『통일박람회』참가-부스명: 통일이랑 복지랑 step by step!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출물 모니터링사업  
제 7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운영
- 2017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지원사업 선정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보건복지부)  
제 8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하반기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 2018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 9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조달전시회 컨퍼런스
- 2019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제 10 회 대한민국나눔대축제 부스 운영  
제 5 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제 5 회 중장년세대 Begin 한마당(9.28)  
창립 10주년 기념 사회복지미래를 위한 Talk 콘서트
- 2020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 6 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제주공감여행  
제 6 회 중장년세대 Restsrt 한마당  
제 11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 202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재허가(12.31)  
제 12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제 7 회 어르신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농촌일손돕기 및 멘토링 공감여행  
제 7 회 중장년세대 앙코르 한마당
- 2022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8년 연속)

##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 2022. 05. 19 (목)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토크콘서트 주제 : 新국제질서와 한국정치의 도전:

-복지 및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정치적 대응력 진단-

□초청강사: 최 연 혁 교수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공동주최: 송 석 준 국회의원

□격려사: 차 흥 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前보건복지부장관

□축 사: 서 상 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前보건복지부장관

1부 사회: 안 자 희 박사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 ● 2021. 12. 10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차기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노동, 교육, 주거(부동산)-

□기조발제 및 사회복지: 최 균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고용·노동: 이 지 만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 육: 양 정 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주거(부동산): 서 진 형 교수 (경인여자대학교.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축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1부 사회: 안 자 희 박사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김 미 령 소장(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2111431412520360> e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2111431412520360> 환경일보

[http://www.snlibo.co.kr/sub\\_read.html?uid=44311](http://www.snlibo.co.kr/sub_read.html?uid=44311) 성남일보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677> 시사포커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115> 글로벌경제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33> 백세시대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144> 이로운넷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51> 복지연합신문

### ● 2021. 11. 10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제발표자 :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토 론 자:

1. 조 성 환 교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 김 정 학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3. 김 상 철 교수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최 연 혁 교수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촉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1부 사회: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본 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892499/> 데일리안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1131339373320664> e대한경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111000503> 뉴스핌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016> 환경일보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4202](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4202) 성남일보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342> 시사포커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521> 글로벌경제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9880](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9880) 한국NGO신문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144> 충청일보  
<http://m.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50> 복지연합신문

## ● 2021. 10. 19 (화)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주제발표자 : 김 우 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토 론 자:

1. 이 태 석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2. 주 원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3. 이 영 숙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
4. 정 창 료 교수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촉 사: 이 효 수 전 영남대학교 총장

1부 사회: 김 기 영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본 연구회 이사)

2부 좌장: 항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4116](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4116) 성남일보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9320](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9320) 한국NGO신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0201824522680634> e대한경제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20> 백제시대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76> 복지연합신문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269> 시사포커스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325> 충청일보

## ● 2021. 9. 15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차기 정부의 복지 :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자 : 김 원 식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토 론 자:

1.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박 영 용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3. 김 광 병 교수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남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4. 김 은 하 센터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
5. 이 상 철 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

축 사: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 원: 행정안전부

1부 사회: 안 자 희 부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892499/> 매일경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3805>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128449> 한국NGO신문

<http://www.snibbo.co.kr/44068> 성남일보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9171555584220949> e대한경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915001201> 뉴스핌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053> 충청일보

## ● 2021. 8. 24 (화)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주제발표자 : 김 동 섭 교수 (한림대학교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보건복지전문기자)

토 론 자:

1. 박 기 남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국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2.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3. 박 선 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4. 김 충 환 과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부 사회: 김 은 경 삼육대학교 겸임교수/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무국장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23154/> 매일경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6177/?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7788](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7788) 한국NGO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00> 복지뉴스

<http://m.snibbo.co.kr/a.html?uid=43991> 성남일보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281321469870185](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281321469870185) 대한경제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826000451> 뉴스핌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 디지털타임스

<https://www.chosun.com/national/obituary-personnel/2021/08/24/OJCOKU6SNFEP5IIDMLUAXXRBCA/> 조선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372> 환경일보

## ● 2021. 6. 16 (수)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주제발표자 : 김 태 기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토 론 자:

1.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2. 이 재 모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3. 김 대 광 청년 (취업후 퇴사, 창업/ 챗터서울 대표)
4. 이 형 준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_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_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3050](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_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 대한경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_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제시대 \_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 2020. 11. 26 (목)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자 :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 복지학과 / 고령사회연구소장)

토 론 자:

1. 박 양 숙 소장 ((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2. 황 진 수 명예교수 (한성대학교)
3. 우 보 환 본부장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부)
4. 박 기 준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_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_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3050](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_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 대한경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_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제시대 \_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 2020. 10. 08 (목)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제 :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단체의 역할

주제발표자 : 박 영 란 교수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토 론 자:

1. 한 정 란 교수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한국노년학회회장)
2. 박 노 숙 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관장)
3. 백 승 민 박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4.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0/10/08/YI2ZT44U2BA27K5ZDXK4QYIHOQ/?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0/10/08/YI2ZT44U2BA27K5ZDXK4QYIHOQ/?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



ign=news 조선일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53> 복지연합신문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32331/> 매일경제  
<http://m.ngonews.kr/120618> 한국NGO신문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010000108> 뉴스핌  
[http://m.getnews.co.kr/view.php?ud=EJ0815060348774ecd436290\\_16](http://m.getnews.co.kr/view.php?ud=EJ081506034877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5948>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47> 백세시대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0110939375520029> e대한경제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859](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859) 성남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211> 충청일보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4> 실버아이뉴스

## ● 2020. 09. 24 (목)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제 : 위드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

주제발표자 :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토 론 자:

1. 신 영 석 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2. 정 형 선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연세대의료복지연구소장)
3. 이 태 윤 기자 (중앙일보 복지행정팀)
4. 홍 선 미 교수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88321/> 매일경제  
<https://news.join.com/article/23879571> 중앙일보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2819/?sc=Daum> 데일리안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18> 복지연합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219> 충청일보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92310485232144ecd436290\\_16](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9231048523214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24001066> 뉴스핌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871> 병원신문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339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339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뉴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206> 청년의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9511> 약업신문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799](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799) 성남일보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8> 실버아이TV/NEW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0423](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0423) 한국NGO신문

## ● 2020. 07. 21 (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제 :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제 1주제: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

주제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오 건 호 공동위원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 2주제: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주제발표자 : 양 재 진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소장)

토 론 자: 1. 윤 흥 식 교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2.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개 회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축 사: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격 려 사: 이 갑 산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1부 사회: 조 중 근 회장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5998940202665018>전기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9225](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9225)한국NGO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6731?sc=Daum>데일리안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548](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548)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73>경인매일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839>내외일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42>복지연합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0000980>뉴스핍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05>이로운넷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53>한국정책신문

## ● 2020. 06. 3 (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 주 제 :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주제발표자: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장/복지대학원 주임)

토 론 자:

1. 이 진 한 기자 (동아일보 의학전문)
2. 사공 정 규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3. 공 선 희 전문연구위원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4. 임 강 섭 팀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1부 사회: 김 기 영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부 좌장: 이 정 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김 상 훈 국회의원

협력단체: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사)서울시보건협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지난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 3)복지 TV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d=34414&index=942&gotopage=4](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d=34414&index=942&gotopage=4)

복지TV: <https://tv.naver.com/v/14221827>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1324954199726018> 전기신문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90> 백세시대신문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73> 농촌여성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8585](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8585) 한국NGO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23188/view> 농민신문  
<http://sundaytimes.kr/View.aspx?No=864001> 선데이타임즈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5050?sc=Daumlogo> 데일리안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348](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경인매일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95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95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083> 의학신문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53431> 메드포뉴스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6031526242324ecd436290\\_16](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6031526242324ecd436290_16) 글러벌경제신문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830> 내외일보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31> 복지연합신문

## ● 2019. 11. 7(목)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 제 :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

토크발표자:

1.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전 보건복지부 장관)
2.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제 9.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3. 성 규 탁 교수 (미국남가주대학교 석좌교수/ 글로벌 문화실천나눔포럼 상임대표)
4. 조 성 철 이사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설립명예 이사장/ 제 17.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부, 3부 사회: 강신성 박사

2부 토크콘서트 진행: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fnewstv.com/news/newsview.php?ncode=1065590229774209> 파이낸셜경제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11116168042040&outlink=1> 돈이 보이는 스페셜 뉴스 Money 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4935](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4935) 한국NGO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735> 충청일보  
<http://www.dailian.co.kr/news/view/841945> 데일리안  
<http://www.ngtv.tv/news/articleView.html?idxno=72889> 엔지티브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73518309189542096> 전기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26> 복지연합신문

## ● 2019. 07. 17(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포용적 복지 정책과 지속가능성

주제발표자: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토 론 자:

1. 조 중 근 교수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 신 소 정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학과장)
3. 김 동 섭 논설위원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63944931183318035> 전기신문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2406](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2406) 한국NGO신문  
<http://www.focus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9> 포커스투데이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72> GV글로벌뉴스통신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81> 백세시대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811721/?sc=naver> 데일리안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8> 내외통신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44> 복지연합신문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5> 실버이뉴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906> 국제신문

## ● 2019. 05. 09(목)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자: 정 순 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1.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

2. 이 상 이 교수 (복지국가소사이터티 공동대표)

3. 황 남 희 연구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1930?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4931?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51011178029947&outlink=1> 머니S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1052](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1052) 한국NGO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794496>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35> 백세시대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38> 복지연합뉴스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5> 실버아이뉴스  
<http://www.ngonews.com/news/article.html?no=13751> 시민운동연합신문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58086391179232018> 전기신문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0346](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0346) 성남일보

## ● 2018. 10. 16(화)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제 1 주제 : ‘노인 자살률 낮출수 없나?’

-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현 명 호 교수(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토 론 자: 양 두 석 교수(안실연 자살예방센터장)

제 2 주제 :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자살 위기진단’

-나이 들에 대한 사회적 통증과 배제

주제발표자: 박 지 영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김 종 래 대표(복지연합신문)

1부 사회 : 문 승 권 박사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조 성 철 (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복지TV, 백세시대신문, 한국고령화산업포럼, 생명연대

## ● 2018. 05. 02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

주 제 :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주제발표자: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사)좋은나라 연구원 이사장)

토 론 자:

1. 양 재 진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2. 정 종 훈 기자 (중앙일보)

3. 노 대 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사회: 이 진 박사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2부 사회: 김 진 학 박사 (본 연구회 이사/ 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 2017. 10. 17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건강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 실업대책 및 재교육-

제 1 주제 :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선진적 운영방식 모색

주제 발표자 : 선 우 덕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서 동 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동 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3. 유 승 호 교수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

## 제 2주제 : 중장년 실업대책과 재교육운영방식 모색

주제발표자 : 김 영 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

1. 한 국 은 초빙교수 (숭실대학교)
2. 최 상 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3. 지 은 정 부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좋은나라연구원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 2017. 06. 29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기조 발제 및 좌장: 노인복지정책 방향: 고령인력 참여복지(Smarter Ageing)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 제 1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주제발표자: 김 미 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제 2주제 :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주제발표자: 전 용 호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제 3주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주제발표자: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자치부

## ● 2017. 02. 23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리미엄 특강 1. 한국 복지정책의 효율성-균형의 길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프리미엄 특강 2. 한국사회복지 미래와 과제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최 :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2016. 12. 02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 1주제 : 일과 빵의 균형개혁

주제 발표자 :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김 도 형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제 2주제 :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주제 발표자 : 고 재 방 (전 교육부 차관보)

토론자 : 최 영 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 2 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공 동 주 최 : 리더십한림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6. 11. 24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2016 청소년유해방송물모니터링사업 결과 보고 겸한 토론회

주제발표자 : 성 윤 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자 :

1. 김 경 수 대학생(단국대학교 경영학과)
2. 최 옥 주 교수(건국대학교 영육아보육학과)
3. 박 열 규 강사(경민대학교 효충교육원 )
4. 박 찬 균 편집국장(복지연합신문)
5. 한 병 재 감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소)
6. 양 혜 지 간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사 회 : 박미출 원장(한국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10.26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

주제발표자: 이 진 석 교수 (서울대 의대)

토 론 자:

1. 이 진 한 차장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2. 정 순 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은 자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실)
4. 최 기 춘 실장 (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후 원 :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 2016. 0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발제 1 :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

발제 2 : 이 연 숙 교수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패널 :

1. 박 신 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2. 구 혜 영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재 만 과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회 : 고 은 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 ● 2016. 02. 03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이주영의원실

주 제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 발표자 : 류 진 석 교수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신 성 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논술위원)
2. 김 태 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 천 우 정 심의관 (국회사무처 행정법제)
4. 박 인 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5. 고 경 환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축 사 : 김 무 성 새누리당 당대표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김 득 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1부 사회 : 조 명 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중계, 성남일보, e-runtv 인터넷 생중계

\*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노출 됨

### ● 2015. 10. 22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과 제언

(\*토론택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고용노동연구원)

토론자 :

1. 이 준 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정 태 센터장(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3. 김 동 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4. 정 양 범 부장(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5. 이 수 민 (국민연금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축 사 :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최 옥 주 (본 연구회 부회장/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 ●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정 경 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론자:

1. 김 현 수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2. 이 상 철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
3. 김 경 록 소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 김 영 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 성 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 고 은 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협 찬 : 국민연금공단

\*\*\*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 ●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중심으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

주제 발표자 :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고 수 석 연구위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유 근 춘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 은 주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4. 김 원 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5. 은 성 호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 유 지 수 총장 (국민대학교)

1부 사 회 : 조 명 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 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2. 최 진 봉 교수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 유 근 형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 박 범 진 이사장 (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 발표자 : 황 명 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양 점 도 교수 (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2. 구 종 회 석좌교수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3. 양 성 근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4. 권 오 영 변호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5.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축 사 : 최 성 균 회장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 김 준 경 교수 (남서울대학교)

## ● 2014. 4. 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 제 1 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

주제 발표자: 양 찬 희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제 2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 발표자: 이 삼 식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 제 3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발표자: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 한 곤 회장 (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1. 박 미 숙 과장 (천안시 여성가족과)
2. 김 태 희 교수 (백석문화대 /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3. 이 명 숙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 이 은 하 분과장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

축 사 : 공 정 자 총장 (남서울대학교 )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 ●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 발표자 : 강 명 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관퇴치회)

토론자:

1. 박 병 현 교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이 태 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3. 서 병 수 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국민연금공단

### ●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 발표자 : 안 상 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론자 :

1. 김 정 근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3. 이 창 곤 소장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4. 유 종 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5. 허 재 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정 윤 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현대자동차

●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 허 준 수 교수(송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론자 :

1.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2. 정 은 상 님 (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3. 현 진 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4. 김 동 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5. 김 명 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6.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 성 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 영 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 제 세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시낭송 : 정 윤 경 (본 연구회 운영위원)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국민건강보험

●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 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 동 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2. 이 준 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3. 조 중 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4. 박 민 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5. 김 선 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6. 윤 철 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 정 레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 양 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흙플러스

●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 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신 인 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2. 이 의 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3. 김 광 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 윤 중 총장(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 성택 총장 (그리스도대학교)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 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박 미 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 준 수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송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 정 한 과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4.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 기 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인 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홍 사장 (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 2011. 12. 20 창립 2주년 겸한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자: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강 학 봉 사업본부장 (사회공동모금회)
2. 임 혜 성 팀장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
3. 곽 대 석 사무국장 (cj 나눔 사무국)
4. 김 현 옥 회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5. 안 명 옥 前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 원 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석 말 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운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캐츠>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 보도

#### ●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 고 영 선 연구본부장 (한국개발연구원)

토론자 :

1. 박 용 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홍 백 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 상 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 심 윤 종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1부 사회 : 박 서 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 ● 2011. 6. 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자 : 김 용 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론자 :

1. 김 미 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2. 이 기 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3. 우 재 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4. 최 용 민 님 (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 성 이 前 보건복지부 장관

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 ●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 이 삼 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론자 :

1. 정 영 훈 과장 (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 미 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 명 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 기 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 진 수 희 보건복지부장관

차 흥 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 영 숙 총장 (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 선 주 (바리톤). 이동형(테너)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일리, 조선일보

### ●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 발표자 : 최 성 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론자 :

1.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2. 신 영 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곽 순 현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 영 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1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자 : 정 무 성 원장 (前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론자 :

1. 박 헌 준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 재 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3. 정 태 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 찬 민 총괄실장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 현 대표 (주)에이스푸드
6. 모 동 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 세 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1부 사회 : 이 승 훈 교수 (국제대학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 발표 : 백 종 만 학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론자 :

1.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2. 장 향 만 사무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3. 이 애 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4. 장 윤 영 도의원 (한나라당)
5. 지 관 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 석 권 前 단국대 총장

김 경 우 회장 (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주제 발표자 : 강 옥 모 교수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김 병 숙 교수 (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 김 창 남 교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3. 조 순 태 소장 (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4. 정 무 성 교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 범 진 前 총장 (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 ■ 공 지 사 항 ■

### 1. 토 론 회

-일시: 2022 6월 29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2. 토 론 회

-일시: 2022 09월 초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3. 자원봉사

-일시: 2022년 추석

-장소: 성남 모란 '안나의 집'

-참여대상자: 남녀노소 불문

### 4. 중장년층과 어르신이 함께 하는 제주농촌일손돕기 및 공감여행

-일시: 2022년 10월 말

-장소: 제주감귤농장

### 5. 토 론 회

-일시: 2022 11월 초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6. 자원봉사

-일시: 2022년 성탄절

-장소: 성남 모란 '안나의 집'

-참여대상자: 남녀노소 불문

\*아래 주소를 클릭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https://www.youtube.com/channel/UCVqg\\_WH11FaBCAx-KZ3lnKg](https://www.youtube.com/channel/UCVqg_WH11FaBCAx-KZ3lnKg) 유튜브 주소

2) [www.sswkorea.org](http://www.sswkorea.org)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3) 예약된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9959424971> 회의 ID: 995 942 4971

## ■ 협력 기관 ■

유한대학교 (총장 이 권 현)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상임대표 백 봉 현)  
 사)화순군 귀농귀촌정보센터 (센터장 전 승 규)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대표 최 용 희)  
 사)한국유스호스텔 연맹 (총재 임 성 준)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학과장 조경훈)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회장 성 규 탁)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 근 화)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강 경 아)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 (학과장 도 미 향)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강 현 정)  
 리더십 한림원 (원장 정경배)  
 휴먼서비스아카데미 (원장 최 은 미)  
 대한민국리더스포럼: 배려와 섬김 (회장 박 창 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 연 보)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 김 광 훈)  
 비)아동안전위원회 (회장 이 제 복)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조 중 근)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회장 이 진)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소장 김 미 령)  
 재)관광장학회 (이사장 홍 효 주)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 후원계좌

1005-702-640482(우리)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2015.10.22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 위한 일자리정책의현황과 정책제안』 토론회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요청으로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 ,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소 3)복지 TV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www.sswkorea.org

2)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34414&index=942&gotopage=4](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34414&index=942&gotopage=4)

3) 복지 TV <https://tv.naver.com/v/14221827>

**최연혁 교수 초청 토크콘서트**

# 新국제질서와 한국정치의 도전:

## 복지 및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정치적 대응력 진단

**일시** 2022. 5. 19 (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송 석 준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초청 교수**

**축사** 서 상 목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前 보건복지부 장관

**격려사** 차 흥 봉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 前 보건복지부 장관

**후원**  행정안전부



**최 연 혁** 교수

·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본 토크콘서트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검색하세요.

**협력단체** |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노동, 교육, 주거(부동산) -

**일시** 2021.12.10(금) 오후 2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기조발제 및 사회복지

**최 군**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보건·의료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 고용·노동

**이 지 만**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교육

**양 정 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 주거(부동산)

**서 진 형** 교수  
(경인여자대학교/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복지공공연구소 대구대학교 고려사회연구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사회시민단체연합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시** 2021.11.10(수) 오후 2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최** 김 상 훈 국회의원

**발표자**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토론자** 조 성 환 교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김 정 학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최 연 혁 교수  
(스웨덴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

김 상 철 교수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부 사회** 이 운 진 교수(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환경과복지등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법사회시민단체연합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700조원 돌파한 국가부채

#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일시** 2021.10.19(화) 오후 2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최** 이 효 수 前 영남대학교 총장

**발표자**

**김 우 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좌장**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이 태 석**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주 원**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이 영 숙**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

**정 창 료** 교수

(단국대학교/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1부 사회** 김 기 영 겸임교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사회시민단체연합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YouTube**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 플랫폼 토론회



**일시** 2021. 9. 15 (수) 오후2시30분

**주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제**

**차기 정부의 복지 :**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

**발표자**

**김 원 식 교 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토론자**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박 영 용 회 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 광 병 교 수**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김 은 하 센터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

**이 상 철 실 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

**주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YouTube**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축사** 김 상 훈 국회의원  
양 금 희 국회의원 (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공동대표)  
김 창 순 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주제 발표자**

김 동 섭 교수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토론자**

박 기 남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 선 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 충 환 과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주 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환경과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모임**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사회시민단체연합**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YouTube**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일 시** 2021.06.16 (수)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대화홀

**축 사** 김 대 완 전 노동부 장관

**격려사** 이 갑 산 명예회장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주제 발표** 김 태 기 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토론자**

1. 이 형 준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2.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3. 이 재 모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4. 김 대 광 청년  
(취업이후 창업)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유튜브, ZOOM 링크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ZOOM 링크**  **회의 : ID 995 942 4971**

**주 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협력 단체**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환경과복지를 생각하는시민의모임** **범사회시민단체연합**



2022.5.26 "제 8회 중장년세대 Re-Challenge 한마당!





2021.10. 15 중장년층 농촌일손돕기 및 멘토링 공감여행(강화도 화도면 고구마캐기 )





2021.10. 22~23 중장년층 농촌일손돕기 및 멘토링 공감여행(충북 보은 대추파기, 괴산)





2021.11.04. 양평용문사 야외공연장 제 7회 중장년세대 안코르 한마당-힐링산책 & 토크콘서트 & 장기자랑





2021.11. 16 경찰어르신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가평 아침수목원, 양평 두물머리





모란 '안나의 집' 노숙인 저녁식사 자원봉사